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박구용** | 전남대학교
공동연구원 **곽유미**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구희남 | 광주광역시교육청
김동혁 | 광주광역시교육청
김혜영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최종순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연구용역 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1. 서론	1
1-1. 들어가며(연구 배경)	3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1-3. 연구 결과의 의의 및 한계	8
1-4.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15
2-1. 연구 방법	17
2-2. 진행 과정	19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 주권자교육	23
3-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와 혼란	25
3-2. 최소 공통 요소 : 주권자로서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	28
3-3. 최소 공통 요소 : 능동적 시민성 발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	31
3-4.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수렴 기준 : 주권자 교육 가능성	35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석	37
4-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39
4-2.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 광주지역 분석	40
5. 민주시민교육 저해요소	47

5-1. (프로그램 전반의 시민 참여) 소비자에 머물고 있는 참여자	49
5-2. (구성원의 관계)기관 내의 위계질서	51
5-3. (프로그램내의 관계)참여자와 참여자, 진행자 간의 소통 부재	52
5-4. (프로그램 사전 조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53
5-5. (프로그램 내용)삶의 공간과 거리가 있는 교육내용	54
5-6. (프로그램 사후 관리) 선순환되지 못하는 참여자 관리	55
5-7. (기관 운영) 낮은 정책적 반응성	56
5-8. (기관 재정) 열악한 기관 재정 문제	57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59
6-1. (프로그램 전반의 시민 참여)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61
6-2. (구성원의 관계)기관내 수평적 관계 형성	62
6-3. (프로그램내의 관계)평화로운 관계 개선	63
6-4. (프로그램 내용)시민과 공동체의 삶이 포함된 민주시민교육	64
6-5.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민주시민교육의 허브 구축	66
6-6. (프로그램 사후 관리)안정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68
6-7. (기관운영 및 재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70
6-8. (기관 재정)시민 후원을 통한 자원 마련	71
6-9. (미래교육 대비)온택트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진의 역량 강화	73
7. 정책적 합의 :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역할, 구성, 특징	75
7-1.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역할 분석	77
7-2.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프로그램 현황	82

7-3.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의 지역성	86
7-4.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사례 분석	91
7-5.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의 방향	93
7-6. 프로그램 만족도와 성공 유형 분석	98
7-7.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사례를 통한 필수 보완요소	101
7-8. 중간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역할	102
7-9. 중간지원조직에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정책	106
7-10.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110
7-11. 중간지원조직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와의 관계	114
7-12. 제언	118
8. 요약 및 정책 제안	125
8-1. 연구 목적과 방법	127
8-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최소 공통 조건 : 주권자 교육	128
8-3. 민주시민교육 유형 검증, 저해 요소 및 활성화 요소	130
8-4. 정책 제안 :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136
참고문헌	143
부록1	145
부록2	146
부록3	159

표 차례

[표 1] 유형별 활성화 요소	12
[표 2] 연구 대상자	18
[표 3] 질문지 예시	20
[표 4] 유형별 활성화 요소	39
[표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39
[표 6] 유형1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0
[표 7] 유형2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1
[표 8] 유형3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2
[표 9] 유형4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3
[표 10] 유형5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4
[표 11] 유형6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45
[표 1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78
[표 1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79
[표 1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분류	80
[표 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현황	82
[표 16]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프로그램 현황: 인문의 숲-인문적 삶과 상상의 공동체	84
[표 17]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프로그램 과목 카테고리	86
[표 18]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온라인캠퍼스 강좌 리스트	87
[표 19]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121
[표 20] 연구 대상자 개요	145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1. 서론

1. 서론

1-1. 들어가며(연구 배경)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정부, 지자체, 교육청과 같은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하는 다양한 민간기관과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많은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이 각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일반화와 다원화가 밀도 있게 강화되고 있다(조철민, 2017).

민주시민교육은 일반화 현상과 맞물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뼈대만 커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수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식화 교육이다.’¹⁾와 같은 형해화와 당파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관련자와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비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당면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첫째, 인권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헌법교육, 반공교육 등과 차별화된 독립적 교육영역을 설정하고 둘째, 정치적 편파성 강화와 양극화, 그리고 폭력적 자기표현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 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법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반적 통계나 지역 단위의 양적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전국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1) 홍윤기 외, 『민주청서21: 2008년도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 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강혜영 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따라서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둘째, 그에 따라 지역과 전국 단위의 실태에 관한 다차원적 연구를 진행하고 셋째,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일반화되고 더욱 다원화되면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형해화와 당파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하나의 유의미한 분석 틀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광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관련자와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먼저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제약조건을 정리하고, 최소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법제화에 필요한 독립적 교육영역과 교육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직면한 형해화와 당파성 비판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연구팀은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제약조건’, 활성화 요소(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추출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제안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근거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제공할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조건’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정책의 기획과 평가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호남권(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한국사회 주권과 인권운동에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성 특히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Th. Eschenburg). 민주시민교육은 이 두 명제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는 주기적이고 평화적이며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거는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있으며, 여기에다 최근에는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가 덧붙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적 갈등이 양극화되면서 깊은 사회적 속고와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곧바로 정치적 표현이 폭력화되는 현상을 동반한다. 양 진영의 프레임 전쟁으로 극화되는 과정에서 정치는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한다. 정치 내부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비판 덕분에 동물 국회가 사라지고 행위능력을 상실한 식물국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체화된 교육을 받지 않은 정치는 결국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들락거리며 표류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전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민주주의자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자는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즉, 시민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서 풀이하는 실천의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상호주관적 시민 주체로 성장한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주권자는 상호주관적 시민주체다. 상호주관적 시민주체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주장이 오류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상호주관적 시민주체는 더 나은 근거를 가진 입장을 자발적으로, 비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호주관적 시민주체는 극한의 갈등과 대립을 외면하기보다 협의와 합의의 과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상호주관적 시민주체, 곧 주권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삼권분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권력 분립과 분산의 원칙이 무력화된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정치학자 크로아상(A. Croissant)이 경고한 위임민주주의²⁾가 등장한다. 즉, 민주주의자 없는 포스트 민주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시민들이 그들의 주권을 정치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파국이 밀려온다. 정치전문가들은 정치공학을 기반으로 시민을 미성숙한 원자적 개인으로 주조하여 ‘쇠 우리’(M. Weber, iron cage)에 감금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런 파국을 극복하려면 시민단체들이 상호주관적 주권자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³⁾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특히 시민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없을 만큼 민주시민교육은 ‘일반화’되고 ‘다양화’ 됐다(조철민, 2017).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덕 교과 및 각종 사회과 교과서 특히 ‘법과 정치’와 같은 교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제도들이나 정치 체계, 민주적 질서의 작동 방식 및 올바른 시민의 자세 등에 관해 일정한 지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의 민주주의 지식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은 형해화와 당파성의 논쟁에 사로잡혀 역사과나 사회과 또는 도덕과 관련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사 정도로 이해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되기도 했다.⁴⁾ 나아가 지식수준을 넘어서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와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아주 미미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일상의 실천적인 수준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습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⁵⁾ 관련하여 민주의식 관련 국제 비교 연구(정충대, 정해철, 2012)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지나치게 지식 습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적 태도와 가치 함양과 같은 태도나 의식의 변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종원 등(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민적 지식은 증가하지만, 정치적·사회적 자아효능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한 정성호(2002)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시민의식 수준이 미국,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2) 정부가 의회를 우회할 수 있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손민주주의의 한 형태

3)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4) 홍윤기 외, 『민주청서21: 2008년도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 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강혜영 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5)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전 계서

6) 염민호 외, 『민주, 인권, 평화 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의 구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 조건(최소 공통요소)을 정리하고, 최소 공통요소를 포함한 다양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활성화 요소와 저해 해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조건’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정책의 기획과 평가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광주시 단체현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광주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가능한 한 성공한 프로그램은 물론 실패한 프로그램, 진보적 성향에서 보수적 성향의 프로그램들,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까지 포괄함-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안하며 형해화와 당파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제약 조건을 충족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요소를 정리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호남권(광주)지역 프로그램들이다. 광주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한국사회 주권과 인권운동에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성 특히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1-3. 연구 결과의 의의 및 한계

1) 귀납법적 연구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통 논의기반 마련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이론과 논리체계에 기초한 연구 방식 대신 귀납법적 방식 즉,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질적연구방법론⁷⁾에 기초하여 그 범위에 대한 최소제약조건⁷⁾(최소 공통 요소)들을 발견하고, 최소제약조건을 충족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요소를 정리한다. 그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공통요소라는 기초하에서 각각 자신들의 개념, 목표, 기준의 다양성을 존중받는 가운데,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점검하는 상호 호혜적 피드백 관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무기력을 초래하는 ‘형해화’와 단 하나의 개념, 목표, 기준으로 통일을 강요하는 ‘당파성 갈등’에 빠지는 가능성을 줄이고 각각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서 창출하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2) 현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콘텐츠 개발 촉진

본 연구는 현행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구성과 활성화 요소 및 저해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들이 넓은 맥락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민주시민교육적 취지와 정체성을 새롭게 생각하며 개선해야 할 점을 찾는 자성과 통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귀납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정리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제약조건과 프로그램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및 저해 요소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입안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을 돕고, 기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들의 출현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7) 최소제약조건은 느슨한 제약조건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발생과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장에서 지속해서 수정되고 변화하는 조건이다.

3) 한계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9개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3개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약 8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운영된 조사이기에 이번 연구 결과를 전국적 상황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른바 보수적 성향을 지닌 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 그 대안으로 관공서의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성향의 프로그램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광주지역은 오랜 지역 차별의 역사를 겪어온 지역이다. 그로 인하여 보수 성향의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관공서의 프로그램 중 보수적 성향의 가치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 기관들을 통해 인성 교육 관련 내용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지역 연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보수적 성향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해나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패사례의 경우, 광주지역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면담 대상자들이 타 단체의 실패를 언급하기 꺼리는 점들이 있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저해 요소,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많은 프로그램’ 등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 등이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 추진과정에서 광주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교육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연구 기간과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연구주제 과제로 구성하는 형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1-4. 선행연구 검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김영삼 문민정부(1993년)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며 그 결과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지식습득을 넘어 개인들의 일상생활 속 습관으로서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심익섭(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문제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이론과 실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불일치’다. 둘째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도구화’다. 셋째 문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무관심’이다. 넷째 문제는 가정·학교·사회 수준에서 수행되는 시민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미비’다. 다섯째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세계화·정보화·다원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기현(2011)은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로 ‘전담 주체의 민주시민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자원체계 간의 연계 미비, 교양·직업·민주시민교육과의 불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⁸⁾

이에 덧붙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왔다. 장은주(2017)⁹⁾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포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와 교육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인성 교육의 체계적 실행을 법으로 강제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 강제하는 ‘인성교육’은 많은 부분 민주시민교육의 지향과 중첩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예’나 ‘효’와 같은 수직적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등, 그 개념과 방법의 불분명성과 국가주도성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그 타당함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 염민호 외, <민주·인권·평화 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의 구성>

9)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피어나, 2017.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틀에 관한 연구보다는 규범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규영, 2005), (김태준 외, 2003; 원미순·박혜숙, 2010)을 제시하거나, 소규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효과 검증(문미희, 2006; 최용성, 2014)과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기현, 2011; 김용찬, 2010; 나달숙, 2011; 최종덕, 2015). 또는 해외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김원태, 2006; 신두철·허영식, 2009; 신두철, 2015).

물론 각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경기도교육청, 2015; 2016; 2017; 2018), 민주인권친화도 조사(광주교육청, 2013; 2015; 2017), 민주시민교육 교원인식조사(전북교육청, 2019),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충남연구원, 2017)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틀에 맞추어 연구를 전개했다는 공통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유사한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정원규 연구팀의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2019)」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유형(패턴)에 대한 연구의 분석 틀을 생성하고¹⁰⁾, 유형(패턴)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원규 등(2019)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인터뷰한 결과 ‘교육 활동이 자체의 절차적 민주성 충족’이란 점 이외에는 공통으로 합의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해당 연구는 교육 활동이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하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 내렸다.

10)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기존의 명확한 이론적, 방법적 틀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목적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 프로그램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홍보 수단, 참여자 간의 활발한 관계 맺음, 안정적 운영공간 확보, 개인적 이해 관심의 충족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우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주제(사회적 주제¹¹), 개인적 주제¹²) 영역 2가지와 교육 관심(의제¹³), 관계¹⁴), 활동¹⁵) 영역 3가지의 조합을 통해 총 6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당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는 ‘표1’과 같다.

[표 1] 유형별 활성화 요소

	사회적 주제	개인적 주제
의제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관심 또는 의미 공유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 중에서 민주적 지향)
관계	민주적 지도자 확보 및 민주적 관계 형성	민주적 관계 형성 통한 공동의 산출 결과 확보
활동	운영진 기획력 확보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확보

정원규 등(2019)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로서 첫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에 따른 유연한 지원은 물론이고, 그 지원에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전술한 중간지원 조직 및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 연합기구 등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이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1)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이거나 단위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주제
 12) 직접적으로는 그 내용이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에게만 관련된 주제
 13) 평화, 통일, 언론개혁 등과 같은 특정한 ‘민주적 의제’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 활동이
 14) 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사람들 간의 ‘민주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교육 활동이
 15) 때마다 다른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론장 형성이나 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감과 배려교육과 같이 ‘민주적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둔 교육 활동이

그리고 해당 연구가 실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프로그램들의 유형을 정의하여, 향후 연구의 유용한 준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6개월이란 짧은 연구 기간 내에 서울지역 9개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만을 대상, 보수단체의 프로그램이나 관공서의 프로그램 포함 시키지 못한 점과 민주시민교육에 우호적인 피험자들의 면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한계점으로 제시하며, 향후 실패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또는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이들을 조사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분석, 활성화 촉진 요소들과 교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2.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1. 연구 방법

선행연구 결과 및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기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합의되지 못한 이론이나 개념 정의를 전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대로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들이 이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 개별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못한 이론이나 개념 정의를 전제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명료화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여 시민의 주체성과 자발성 함양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특정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당파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원규 등(2019)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과 범위 등의 정립에 대하여 ‘이론에 기반한 연구’ 대신에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우선 실천함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원주의 속에서 형해화 또는 당파성에 흔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성 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위해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활용하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형태의 귀납적 접근을 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심층 면담과 초점집단면담 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면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18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9명)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6명)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와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간 중복되는 인원 존재)

자료 수집 절차는 정원규 연구(2019)에서 사용하였던 방식과 같이 문화기술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래들리(J.Spradley)의 방법을 차용. 서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 집중관찰(focused observation) -> 선별적 관찰(selective observation)을 변형하여 조사대상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덧붙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2019)’ 등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실태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 등을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담 등 질적 연구의 결과물 분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에게 불쾌한 감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고, 면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어떤 불이익 없이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다. 아울러 광주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시기별 면담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 면담 대상자의 이름과 단체명을 가명으로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료 또한 연구자들 이외에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3년, 개인 정보가 삭제된 자료는 5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2-2. 진행 과정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로 광주지역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약 40여 개의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1차 연구대상 리스트에 기록된 4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정원규 연구(2019)에서 제시된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넓은 정의¹⁶⁾’를 연구대상 선별기준으로 활용하여, 기초 조사와 예비 면담을 진행, 총 12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중간지원조직 포함)을 최종 선정하였다. 해당 조사와 면담 과정에서 통일, 인문학, 환경, 도시재생, 봉사, 5.18, 마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공통 요소(최소 제약조건)가 민주시민사회의 제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형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연구진들은 문헌 자료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활성화 및 저해 요소,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련된 요소들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용, 참여자용, 중간지원조직 담당자용 3가지로 제작되었다. 구체적 문항은 <단체/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특징>, <관계-진행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효과-개인적 효과/ 사회적 효과>, <민주주의, 시민, 민주시민교육, 주권자교육,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면담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조정, 총 14개 문항(세부 문항 미포함)의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예비 면담을 통해 조정된 부분은 주로 면담 대상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문지에 사용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풀이하는 것이었고, 민주시민교육 질문 문항과 별도로 주권과 주권자교육에 대한 질문 문항을 추가로 넣어서 주권자 교육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주권자교육이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가능성 정도를 측정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되었다.

16) 교육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표 3] 질문지 예시

단체

- 최근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 민주시민교육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은?
- 최근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 가장 특색있었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점은?
- 정부나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 본 단체나 다른 단체 모두 포함하여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사례?
-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연계된 요소, 민주시민 교육적 요소 추출해보신다면?

참여자/진행자 관계

-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진행자와 피하는 진행자는 어떤 유형?
- 진행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등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식은?

효과

-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그리고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는지?
- 프로그램으로 인해 개인,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지?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

-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에서 가장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란?
-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 지역에서 주권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와 같은 질문 문항을 활용하여 총 12개 단체 22명의 민주 시민교육 진행자 및 참여자,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나온 응답을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최소 공통 요소(최소 제약 조건)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이론과 논리체계에 기초한 연구 방식이 부딪히는 현실 괴리, 당파성 논쟁을 일정 정도 극복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 사이에 공통의 논의기반 마련의 가능성을 보았다. 또 공통 문항에 대한 진행자, 참여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들의 응답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소들로 제시된 응답들로부터 최대한 타당성이 높은 요소들을 추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항은 보고서 뒤에 첨부한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설문을 활용한 심층면접과 FGI과정을 거쳐 모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5. 민주시민교육 저해 요소, 6. 정책적 함의 : 중간지원조직의 장에 서술되었다. 단 자료의 수집과 서술이 정형화 되지 않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기에 가독성과 전달성을 위해 연구진이 면담 대상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부 변형해서 수록하였다. 단 그 과정에서도 면담 내용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석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 주권자교육

3-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와 혼란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과 범위 등의 정립에 대하여 ‘이론에 기반한 연구’ 대신에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우선 실천함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원주의 속에서 형해화 또는 당파성에 흔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기존의 질적·양적 연구 Data를 수집,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정원규 연구(2019)-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에서 사용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각 조사대상에 대한 설문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

‘저희는 광주지역 내에서 교육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지원체계 구성의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모쪼록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된 양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2019)”의 광주광역시 시민교육 운영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9년 10월 7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28개의 기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민선 7기 시정 운영 가치에 걸맞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 정신과 민주 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¹⁷⁾

‘귀 기관(단체)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원리 및 가치, 인권, 사회정치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 모색, 의사소통능력, 협력과 연대 의식 배양 교육 등이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28개 기관 중 11개의 기관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각 기관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기관은 참여하였고, B라는 기관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민주 의식 함양이나 시민교육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혼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면담 대상자들은 자율성, 권리, 자기실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과 공동체, 책임 의식, 연대성 등 공동체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들이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모두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측면들의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가 존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17) 광주광역시 시민교육 운영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주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조사기관: (주)폴인사이트 (2019)

<인터뷰1. 민주시민교육 개념> 12-1.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덕목 교육을 강조한 답변들

- 올바른 사회인식을 통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그 자질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로그램 진행자)

- 자신의 이익을 조직화를 통해 의견을 만들고 공적인 영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로그램 참여자)

- 건강한 개인(존엄성, 프라이버시, 자율성과 자기실현, 자기통제)을 지향해 가는 것

(5번 프로그램 진행자)

공동체적 덕목 교육을 강조한 답변들

-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프로그램 참여자)

- 공동체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3-2. 최소 공통 요소 : 주권자로서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한 실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최종보고서」(정원규, 김형철 외3인, 2019)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수준의 정의로서 주권자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에 이를 근거로 한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규정은 실천적 합의를 이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권자 교육을 ‘교육의 대상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최소한의 공통적 정의로서 주권자교육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민주시민교육 개념으로 너무 협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연구는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강경선, 2012) 연구를 통해 주권을 정치적 주권 개념으로 한정 짓지 않고 ‘생활 정치’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주권자 교육(정원규, 김형철 외 3인(2019))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주권자로서의 자각’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공통적 요소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결과가 나왔다. 면담 대상자들은 진행자,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가릴 것 없이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전체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때 ‘국민’이란 단어 대신 ‘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 이유는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사유와 행위의 자율적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개인을 국가와 전체의 종속범주로 대상화·수단화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자신을 국가와 전체의 종속범주로서 수단화·대상화시키지 않고, 스스로가 사유와 행위 자율적 주체 즉 주권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인터뷰2. 시민과 국민> 11-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민'과 '국민' 단어 중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 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국민은 전체주의적 국가 하에 동원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프로그램 진행자)

- 시민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주의·전체주의적 용어로 사유와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을 국가와 전체의 종속범주로 대상화·수단화하기 때문입니다.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아울러 면담 대상자들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답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자신과 동료 시민을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사회적 연대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공론장에 참여하여 소통하고 합의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권자교육의 핵심 요소중 하나인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3. 시민 의미> 11-1. 시민의 의미

- 올바른 사회인식을 통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로그램 진행자)

-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자율적 삶의 주체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

(6번 프로그램 진행자)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 주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

(7번 프로그램 참여자)

- 당당한 권리 주장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11번 프로그램 참여자)

- 시민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개별적이고 능동적인 주체, 시민은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만 머무르는 시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실천한 경험과 체험이 체화되어 민주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핵심이 되는 사람이어야 함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광주지역의 면담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서로를 자율적인 주권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각 개인이 사회적 연대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적절하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담 대상자들의 생각은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중첩적 합의지점으로서 주권자교육(각 개인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¹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추론해본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의 연구 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5.18, 통일, 환경운동, 지역 인문학, 자원봉사,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로서 이들 사이에서 주권자 자각과 존중, 연대 수준에 따른 참여와 소통 등 주권자교육의 요소가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주권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기준에 중첩적 합의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18) 정원규, 김형철 외3인,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에서 발행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최종보고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2019.

3-3. 최소 공통 요소 : 능동적 시민성 발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앞선 정원규 연구(2019)와 유사하게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넓게 보는 관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4. 민주시민교육 의미> 12. 민주시민교육 의미

- 민주시민교육은 자율적 삶의 주체이자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2번 프로그램 진행자)
- 민주시민교육은 방식에 있어서 진행자와 기획자, 참여자가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과 혐오,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스스로 느끼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프로그램 진행자)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강의나 이론적 교육이 아닌,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면서 고민하고, 깨닫는 과정들을 통해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11번 프로그램 참여자)
-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공동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인권, 평화, 통일 등)이라고 봅니다.
(중간지원조직 1번 담당자)

이처럼 면담 대상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한 광주지역 면담 대상자들 응답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과 동료 시민을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존중하는 태도, 사회적 연대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공론장에 참여하여 소통하고 합의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능력 함양’이라는 요소들(능동적 시민성 발현을 위한 필수적 능력¹⁹⁾)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본 연구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와 혼란' 부분에서 언급된 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서 개인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과 공동체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들 사이에서도 해당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인터뷰5. 민주시민교육 의미> 12. 민주시민교육 의미

- 올바른 사회인식을 통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그 자질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로그램 진행자)
-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 개념, 가치관과 **소통 방법**을 참여자 스스로 교육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다.
(4번 프로그램 진행자)
- **자율적 삶의 주체**이자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6번 프로그램 진행자)
-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7번 프로그램 진행자)
- 개인으로서 자신을 지키면서,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8번 프로그램 참여자)
- 공동체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즉, **시민은 사회 속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인식, 참여,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더불어 사회문제, 갈등해결의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 1번 담당자)

19) 정원규 외, 전게서. pp.12-14

이렇듯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민주시민교육 범위 설정의 최소 공통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설문 문항 10번 민주주의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답변을 통해 뒷받침되어진다. 우선 설문 문항 10-1. 민주주의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면담 대상자들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서로를 동등하게 자율적인 주권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로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목적이자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공통점으로서 자율적인 주권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로서 참여의지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제시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뷰6. 민주주의 의미> 10-1. 민주주의 의미

-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을 통해 소속 공동체 성원으로
 공익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로그램 진행자)
- 각자의 다름을 드러내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과
 연대의 가치
 (2번 프로그램 진행자)
- 사회의 여러 갈등을 물리적 폭력이 아닌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공익의 방향으로 합의해가는 체제
 (1번 프로그램 참여자)
- 나와 타인은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합
 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프로그램 참여자)
-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구
 조가 형성되는 것
 (11번 프로그램 참여자)
- 민주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나와 타자의 인격을 상호평등의 관점에서 존중하는 조화로
 운 삶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인민 스스로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 선의 개념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체계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올바른 참여와 대표성과 책
 임성의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동의에서 유래할 경우, 그 결정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이다.
 (중간지원조직 2번 담당자)

다음으로 설문 문항 10-2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답변은 참여와 소통능력 함양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규정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요소이자 중첩적 합의점으로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면담 대상자들이 10-2.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며 차이를 동질화하는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면담 대상자들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공론장에 참여하여 상호주관적으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인터뷰7. 민주주의와 반대 개념> 10-2.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 또는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이를 동질화시키고 차별을 묵인하는 폭력입니다.(독재)
(2번 프로그램 진행자)
- 한 개인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번 프로그램 진행자)
-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것 (8번 프로그램 진행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물리적 폭력으로 다른 것을 억압하는 것
(1번 프로그램 참여자)
-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신의 주장만을 외치는 이들이 많아서입니다.
(4번 프로그램 참여자)
- 폭력과 강압으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3-4.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수렴 기준 : 주권자 교육 가능성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상**이었다. 우선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2019)”에서 각 기관 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기관은 참여하였고, B라는 기관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민주 의식 함양이나 시민교육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의미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자율성, 권리, 자기실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과 공동체, 책임 의식, 연대성 등 공동체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들이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가 부재함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성찰과 고민 속에 참여하기보다 금전적 목적, 이윤 추구, 일자리 개념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참여자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진행자와 참여자간, 참여자와 참여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산규모가 작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 교육 특히 주권자로서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때 국민이란 단어 대신 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모든 면담 대상자 (무응답 1명 제외)로부터 나왔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국가와 전체의 종속범주로 이해하는 대신 사유와 행위의 자율적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자신을 자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스스로를 자각해야 함이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면담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자율적 삶의 주체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의 연구 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5.18, 통일, 환경운동, 지역 인문학, 자원봉사,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로서 이들 사이에서 주권자 자각과 존중, 연대 수준에 따른 참여와 소통 등 주권자 교육의 요소가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주권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기준에 중첩적 합의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공통 요소로서 능동적 시민성 발현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이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묻는 문항에 대하여 면담 대상자들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서로를 동등하게 자율적인 주권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로서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을 민주주의의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체로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면담 대상자들이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 제시에 있어서 공론장 참여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생각한다.

주권자 교육의 세 가지 요소를 주권자로서 자각 교육,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교육,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 발현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된 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 교육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석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석

4-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정원규 연구팀의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2019)」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유형(패턴)에 대한 연구의 분석 틀을 생성하였다. 분석의 기본 틀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소로 교육 주제 영역에서 사회적·개인적 주제, 교육 관심 영역에서는 의제·관계·활동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가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4] 유형별 활성화 요소

	사회적 주제	개인적 주제
의제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관심 또는 의미 공유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 중에서 민주적 지향)
관계	민주적 지도자 확보 및 민주적 관계 형성	민주적 관계 형성 통한 공동의 산출 결과 확보
활동	운영진 기획력 확보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확보

[표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사회적	개인적
의제	유형1 - 전문성 확보 예) 참여연대 ‘행동하는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학교’	유형2 -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예) 참여연대 ‘기타 교실’
관계	유형3 - 민주적 지도자 확보 예)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여성사 강사 양성’ 및 ‘마실 정기 답사’ 등	유형4 - 공동의 산출 결과 예) 성북구청 ‘찾아가는 골목 회의’
활동	유형5 - 운영진 기획력 예)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유형6 -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예) 극단 작은곰 ‘우리 동네에서 연극을 만나다’

4-2.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 광주지역 분석

정원규 연구팀의 민주시민교육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활성화 요소가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참여자의 속성 등 운영의 제반 사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원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이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에게도 어떻게 발견되는지 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유형1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1	사회적 주제	의제 중심
특성	구체적인 민주적 결과를 성취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므로, 유능하며 활동가능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활성화 요인	전문성 확보 - 참여자들 중에 예비 활동가들이 많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광주 지역의 상황	다양한 분야의 강사 인력풀 및 강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및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 도시들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518민주화운동 및 교육마을공동체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 있는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활동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동가능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함이 확인 되었다.	
인터뷰 내용	광주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특정 분야인 518민주화운동이나 교육마을공동체에서는 활동하시거나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강사가 많이 있지만 다른 분야는 그렇지 못해 항상 수도권의 강사(교수진, 시민단체 활동가)를 모셔야만 해요. 이러한 상황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중간지원조직 중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나 노덧돌, 시민자유대학에서 예비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3번 프로그램 진행자) 시민자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초적인 민주시민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도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광주와 연계된 다양하나 이슈를 주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던 것 같고 강사들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활동을 이끌어 주었어요. (3번 프로그램 참여자)	

[표 7] 유형2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2	개인적 주제	의제 중심
특성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결과 성취에 대한 지향은 뚜렷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며, 또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진행자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활성화 요인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 전문가들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므로, 전문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지향점이나 그러한 활동 자체의 의미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광주 지역의 상황	프로그램 운영 결과의 성패에서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프로그램의 자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어떻게 참여자와 공유하는지가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의 지향점을 참여자가 잘못 인식한 경우, 기관의 지향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보다 참여자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와 상세한 안내가 참여자의 참여 자세 및 효능성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 내용	<p>교육기관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518기념재단 해설사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지향점, 학습하고 활동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운영자와 강사가 참여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주었어요.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참여자와 공유되니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설사의 중요성과 그 후 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니 프로그램 참여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p> <p style="text-align: right;">(1번 프로그램 참여자)</p> <p>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의할 때에는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너무 낮았어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사가 당위적으로 제시하니 그런 것 같아요.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참여자들은 참여 그 자체로 최소한의 의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깐요. 다만 그것을 잘 드러내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아쉽죠.</p> <p style="text-align: right;">(8번 프로그램 진행자)</p>	

[표 8] 유형3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3	사회적 주제	관계 중심
특성	민주적 지향과 무관하게 지역민이나 학부모라는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초기에는 민주적 지향에 이르게 하는 데에 필요한 민주적 의지와 리더십을 지닌 사람에 의해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된다.	
활성화 요인	민주적 지도자 확보 - 일반적으로 이러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많지 않으므로 일정 단계를 지나면 지도자의 소진으로 인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 지역의 상황	광주지역은 지역 특성상 민주주의 및 주권교육 일반의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민주적 지도자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비민주적 지도자의 문제보다는 소수의 활동가와 그들의 번아웃이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뷰 내용	<p>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전제는 민주적인 운영이에요. 특히 광주는 민주화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체험이 상존하는 동네이기에 민주적 운영은 기본 전제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나 담당자들도 경제적 이득보다는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보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p> <p style="text-align: right;">(4번 프로그램 진행자)</p> <p> 참여자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기울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강해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비민주적 운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활동가 들중에 이탈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p> <p style="text-align: right;">(3번 프로그램 진행자)</p>	

[표 9] 유형4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4	개인적 주제	관계 중심
특성	유형 3과 상황을 공유하지만, 아직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게 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활성화 요인	공동의 산출 결과 -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의 산출 결과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공유하는방식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광주 지역의 상황	자신들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토의·토론 등의 숙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직접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자들과 참여자들은 유형 4의 활성화 요소가 중요함을 구술하였다.	
인터뷰 내용	<p>아직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루하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3시간 쪽 자신이 연구한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지루해요. 그런데 다음 프로그램에서 만난 강사 선생님은 우리 동네 뒷산 산책로 관련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저희에게 토론해보도록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몰라도 우리 문제를 토론해보니 재미있었고 흥미도 생기더라고요.</p> <p style="text-align: right;">(8번 프로그램 참여자)</p> <p>수업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 보다는 피하고 싶은 방식이 있어요. 전달 위주의 강의형 수업이에요. 강의형 수업을 하면 후반부에는 거의 핸드폰만 하세요.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강좌인데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들죠. 좋은 것을 강의로 드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문제를 동네사람들 끼리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어요. 그럴 때 주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주권자)라고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p> <p style="text-align: right;">(8번 프로그램 참여자)</p>	

[표 10] 유형5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5	사회적 주제	활동 중심
특성	넓게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민주적 지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쟁점 토론이나 공정 선거 운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주적 근본 원칙, 문화 등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활성화 요인	운영진 기획력 -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므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의제, 활동 방식 등이 중요하다.	
광주 지역의 상황	운영진의 기획력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 홍보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어떤 의제와 활동 방식을 택하느냐가 프로그램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몇 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기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및 민주시민교육 허브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뷰 내용	<p>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할 때 가장 힘든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예요. 대상도 중요하고 주제도 중요해요. 특히 주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성패가 가름되기도 해요. 프로그램 강의를 요청할 때에도 강사들에게 이점을 강조하죠. 지금 우리 사회 및 지역의 문제점을 주권자가 어떻게 바라봐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를 많이 내주기도 해요.</p> <p style="text-align: right;">(6번 프로그램 진행자)</p> <p>작은 단체들은 기획력이 떨어져요. 상주하는 활동가들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너무 적구요. 적은 수가 프로그램을 짜다보니 당연히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자들은 금방에 알아차리고 다음 프로그램에 적게 참여해요.</p> <p style="text-align: right;">(8번 프로그램 진행자)</p>	

[표 11] 유형6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6	개인적 주제	활동 중심
특성	민주시민교육보다는 관련 주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성화 요인	<p>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p> <p>-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셈이므로,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일차적 관건이 된다. 그러한 요소가 충족된다면 유형 2, 4 등과 유사한 관정을 밝게 될 것이다.</p>	
광주 지역의 상황	<p>광주는 지역이 협소하여 강사와 참여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까울 수 있다. 작은 지역공동체이기에 인간관계가 서로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참여자가 갖는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구축이 쉬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면담자들은 상호간의 신뢰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서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심지어 프로그램 내용보다 상호 신뢰 관계 조성이 프로그램 성패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p>	
인터뷰 내용	<p>잘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시면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도와주시는 강사님을 뵈실 때 프로그램의 내용과 별도로 믿음이 가요. 한시간 중에 10분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강사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며 그 10분은 60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p> <p style="text-align: right;">(3번 프로그램 진행자)</p> <p>참여자들이 진행자를 믿고 따라오면 힘이 생기죠. 더 알려드리고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하게 될 수 있구요.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운영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뢰는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들 보고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감정노동자가 된 기분 아닐까요? 하지만 필요하기는 해요. 상호간의 신뢰가.</p> <p style="text-align: right;">(1번 프로그램 진행자)</p>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5. 민주시민교육 저해요소

5. 민주시민교육 저해요소

5-1. (프로그램 전반의 시민 참여) 소비자에 머물고 있는 참여자

진행자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자세, 편함과 즐거움을 위주로 하는 문화 의식에 대해 지적하였다. 시민들은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교육을 선호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인문학적 사유, 철학적 접근, 활동식 수업 등) 수업에는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후자의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론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은 차츰 교육 내용에서 살아지게 되었다.

<인터뷰8. 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

“인문학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하고 심지어 일부 참여자들은 중도 탈락해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는 이론적이거나 어려운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 답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기관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죠.”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참여자들은 자신을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개입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특징에 맞게 활동을 하자고 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간식과 시설 환경 등과 관련된 과한 것을 요구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불만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측면이 아닌 부수적인 측면의 요구로 마치 물건을 구입하는 수요자가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보다는 참여자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부수적인 것에 대한 준비에 치중함으로써 진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인터뷰9. 프로그램 참여자 태도>

“참여자는 고객님! 참여자들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입장만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자나 교육기관이 그들을 객체로 생각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요구들이 다소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요구를 시민의 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해요.”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상품 소비와 유사한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유명한 강사,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강의가 주로 개설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강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쌓기의 일환인 이벤트 중심으로 개설되는 것이다.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인기 있는 주제의 유명 인기 강사의 이야기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인기영합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그 질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인터뷰10. 프로그램 구성 어려움>

“지방의 기관은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기가 힘들죠. 그러니 시민들에게는 재미가 없어지고 서서히 참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의 힘이 약해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서울이나 큰 기관에서 치고 들어와요. 예산이 많은 기관들은 유명한 스타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해버리니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어요.”

(6번 프로그램 진행자)

5-2. (구성원의 관계)기관 내의 위계질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에서 부실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기관 내에 위계질서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 문화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내용, 방법에 대한 민주적 합의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교육기관의 조직 풍토가 되었다고 하였다. 합의보다 상명하달의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교육기관내의 문화는 구성원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생각이 민주적인 공론의장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막히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고경력, 상급자 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인터뷰11.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아직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기관 내에 위계적인 질서 문화가 있어요. 토론과 토의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몇 단체에서는 나이와 경력에 의해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사안들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연령, 저경력, 저경험자들의 의견이 많이 무시당하죠. 기관 내에 끈대 문화가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을 참신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5-3. (프로그램내의 관계)참여자과 참여자, 진행자 간의 소통 부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간(참여자과 참여자, 참여자과 진행자)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참여자들 사이에 생기는 생각차을 좁히기 위해 숙고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및 기관에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진행자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추어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장기간의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과 진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를 공유하여 해결하고자 하기 보다는 모른체 넘어가거나 그 문제를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니 그냥 교육을 포기하여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소통의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익숙치 않은 풍토가 큰 이유가 되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인터뷰12. 프로그램 운영 갈등 해소 방법>

“참여자인 우리들 스스로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운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땡깡을 피우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해요. 자기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참여자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진행자와 기관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러니 몇몇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도중에 나가버리거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으려해요.”

(2번 프로그램 참여자)

5-4. (프로그램 사전 조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제한되고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적정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는 위기까지 격는다고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이 참여자와 진행자의 이야기였다.

<인터뷰13.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정보 부족>

“어디서 무슨 내용이 수업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운이 좋아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강의를 추천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규모가 큰 기관들은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듣고 말고는 제가 결정하지만 무엇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7번 프로그램 참여자)

5-5. (프로그램 내용)삶의 공간과 거리가 있는 교육내용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참여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면담자들은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없기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적어지게 되어 주권자의 수신자로서만 기능할 뿐 발신자로서의 기능은 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시민들의 삶의 공간의 문제가 등한시 되어 시민들이 주도권을 잃게 되고 기관에 의해 객체화되어버렸고 자신의 삶보다는 주어진 주제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자신과 지역, 공동체와 동떨어진 민주시민 교육은 전지역, 전범위의 공통 주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시민의 주체적 실천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구술하였다.

<인터뷰14. 프로그램 기획>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교육기관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은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몇몇 기관들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채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문학을 주로 하는 저희로서도 인문학을 지역에 연계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의 인문학적 접근을 우선시켰어요. 이는 시민들의 삶과 다소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6번 프로그램 진행자)

5-6. (프로그램 사후 관리) 선순환되지 못하는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참여자를 사후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시민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sns상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 공간을 만들거나 참여자와 진행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수준에서 연결관계가 약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한 연결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고 제2, 제3의 새로운 시민 활동가 및 진행자를 발굴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인터뷰15. 프로그램 사후 관리>

“안타깝죠. 프로그램이 끝나면 말 그대로 관계가 끝난다고 봐야 해요. 일부 열정적인 진행자들은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뿐이에요. 참여자들은 몇 시간의 시간을 때운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잖아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적절한 사후 도움이 주어지면 그들이 또 다른 시민활동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될 수 있는데 아쉽죠.”

(1번 프로그램 진행자)

5-7. (기관 운영) 낮은 정책적 반응성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모사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배정되어 상급 기관에 의해서 실제 운영에 대한 간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 예산의 사용되기에 일정 부분의 제한은 필요하나 상급 기관의 의도만을 강요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결과 중심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한계는 시민의 요구보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충실하게 되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하여 정책적 반응성을 낮게 하였다.

<인터뷰16.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확보 및 예산의 관계>

“자체 조달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나 상급기관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을 지급한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정 프로그램에는 상급기관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간섭하기도 해요. 물론 세금으로 운영되고 위탁이라는 제도상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간섭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켜요.”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5-8. (기관 재정) 열악한 기관 재정 문제

진행자들과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제시하는 저해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이 재정의 문제였다. 아직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교육기관들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시민운동이 아직 일상화 되지 않았기에 시민들의 후원문화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관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 재정을 정부나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의 의도에 맞도록 프로그램 기획을 기획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자율적 결정보다는 예산을 배부하는 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산 배부에 따른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예산을 배부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배부하는 기관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 내야 하고 이러한 눈치보기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일회성 행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인터뷰17.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예산의 관계>

“문제는 돈이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기관들의 재정이 열악해서 불가능해요. 결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따워서 진행하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산에는 평가가 따라요.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참여 숫자를 늘리거나 만족도를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해요. 눈치보기가 시작되는 거죠.”

(1번 프로그램 진행자)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6-1. (프로그램 전반의 시민 참여)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기관·법률·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단순한 설문 형태로 수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프로그램의 구안 단계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교육기관에 제시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겸한 프로슈머 형태를 갖추자는 것이다. 또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시민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하여 프로그램 구안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프로그램이 시민의 욕구와 삶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인터뷰18. 프로그램 기획>

“시민들이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안하여 공모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시의성이 떨어지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이 뒷받침 된다면 프로그램의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구상하여 기관에 제시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묻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서 묻는 게 필요해요. 설문이든지 아니면 지원단을 구성해서든지 시민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프로그램은 기관에 입맛에 또는 핵심 참여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거예요.”

(6번 프로그램 참여자)

6-2. (구성원의 관계)기관내 수평적 관계 형성

저경력·저연령 진행자 및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 주장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저경력·저연령 진행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시간이 짧지만 고경력·고연령 진행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내용을 찾아내어 프로그램으로 구안할 수 있다. 그들이 만든 모든 내용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교육기관 조직을 팀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의 팀 구성은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출발점이 된다고 진행자들이 이야기하였다. 교육기관들의 직제 개편을 통해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실행할 수 있는 풍토 개선이 시급함을 연구자들은 제안한다.

<인터뷰19. 프로그램 관련자들 간의 관계>

“저경력 진행자들은 고경력 진행자들보다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이 참신하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반영했으면 해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들도 팀별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번 프로그램 진행자)

6-3. (프로그램내의 관계)평화로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진행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중도 이탈자들이 생기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 급감하게 된다. 그렇기에 프로그램 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연구진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올바른 관계 개선은 어떠한 제도적 해결책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소양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최대한 그러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인터뷰20. 프로그램 운영 갈등 해소 방법>

“프로그램 진행할 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불편해지기도 해요. 해결을 해야하는데 진행자도 기관도 별다른 수가 없잖아요. 싫으면 싫은 사람이 나가야 하죠. 단지 아쉬운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에서 세심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었으면 해요. 들어만 줘도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좀 참을 필요가 있어요. 싫다고 싸울 수만은 없잖아요.”

(3번 프로그램 참여자)

6-4. (프로그램 내용)시민과 공동체의 삶이 포함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시민과 공동체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에는 삶의 의미가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삶과 주권자가 모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주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회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시되어야 함을 참여자와 진행자들은 이야기하였다. 고차원적인 사고의 접근이지만 이러한 사고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시민과 공동체의 삶이 디자인되어 투영된 민주시민교육이 미래의 주권자와 현재의 주권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고 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인터뷰21. 민주시민교육 의미>

“민주시민교육은 자율적 삶의 주체이면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진정어린 고민이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참여자들은 재미있고 의미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7번 프로그램 진행자)

또한, 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생활 전반과 연결된 교육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지역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면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과 연관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성취감은 다음 단계 교육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시민들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과 멀리 있는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도 유의미하다는 시각을 갖는 것이 생활 속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인터뷰22. 민주시민교육 의미>

“지금까지 제가 참여한 민주시민교육은 생활 속 교육이라기 보다는 이론적 교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거였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와 어려운 점을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것들의 과정과 결과를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실패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번 프로그램 진행자)

6-5.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민주시민교육의 허브 구축

민주시민교육의 허브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허브란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시민들 및 진행자, 지역의 기관 심지어 전국의 기관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을 말한다.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특정 공간에 모이고 진행자와 참여자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특정 기관(이후 중간지원조직에서 다시 언급됨)을 설립하여 정보가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내거나, 정보가 자연스럽게 수합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허브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허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단계별 프로그램과 연계된 주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허브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구안 단계에서 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의 네트워킹 및 참여자 사후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허브를 통해 참여자와 진행자, 기관 등의 제반 참여자들이 긴밀한 연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23. 프로그램 관리 운영 방식>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인력과 재정
정의 한계로 인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각 교육 기관들이 분절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모든
기관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역 내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허브인 것 같아요. 정보가 특정 공간에 수합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단체 간에 협업과 분업을 할 수 있을거예요. 조정도 가능하구요”

(1번 프로그램 진행자)

“참여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참여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어느 날에는 일이 많다가 어느 날에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음알음 알아서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진행자들은 형편이 좋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 정보 특히, 진행자 모집 정보가 한 공간에 모이면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고 봐요. 평가는 수요자인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요. 지금은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지만 실제 해당 내용은 기관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요. 정보가 불투명 하니 시민들의 평가도 잘 반영되지 못하고요. 시민들의 진심어린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공개되어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된 평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8번 프로그램 진행자)

6-6. (프로그램 사후 관리)안정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육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교육기관과 참여자, 진행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사이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쉽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것은 위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허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교환된 의견을 새로운 교육과 정책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반영될 수 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도록 하기보다는 조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후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참여자들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결국 참여자를 단순 참여자에서 적극 참여자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민주시민들이 연결 프로그램 또는 하위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프로그램 개발자 및 진행자로, 공동체의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24. 프로그램 사후 관리 방식>

“프로그램 참여자를 단순히 네트워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제로 sns공간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거든요. 시간의 부재 때문이겠죠. 단순한 네트워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진행자로, 활동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요. 실제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질이 있는 참여자를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 참여시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참여자들은 활동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구요.”

(6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이수증과 자격증은 민주시민교육의 의지를 북돋운다. 이수증과 자격증 부여에 대해 현실영합주의라고 터부시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면담자들은 참여자들이 갖는 현실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수증과 자격증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인 중 하나임을 이야기하였다. 시민들의 욕구는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보다 더 강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이수증을 발급하고 발급한 이수증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어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수증과 자격증이 참여자들의 삶에서 새로운 수단이 되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활동의 윤택유 역할 될 수 있다. 이수증을 도구로 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은 민주시민교육의 깊이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겠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에 합당한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면 참여자가 단순 참여자가 아닌 진행자, 프로그램 기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격증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을 민주시민교육 허브에 등록하여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외연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인터뷰25. 프로그램 자격증 부여 효과>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자격증은 참여에 도움이 되요. 자기 욕구가 강한 분들은 지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자기 욕구는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높을 때 나타나거든요.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최소한의 것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한 욕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요. 보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보상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프로그램 진행자)

6-7. (기관운영 및 재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기관들은 자생적 조직도 있고 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도 있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행정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결국 정부나 상급 기관의 행정과 예산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교육기관들은 예산을 교부한 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이 낮아진다. 낮은 자율성은 프로그램을 다양성을 해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우를 범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면 교육기관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26. 프로그램 자율성 확보-재정적 독립>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올가미가 되고 있어요. 주는 창구는 정부와 상급기관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교부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책잡히지 않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별로 비슷해지는 거죠.”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6-8. (기관 재정)시민 후원을 통한 자원 마련

시민은 단지 강의를 듣는 소비자가 아님을 참여자, 진행자 모두 강조하였다. 시민들 스스로가 교육프로그램의 소비자가 아닌 프로그램, 시민단체와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주권자이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시민들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주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주권의 수신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임감의 출발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특별하게 시민들의 후원을 강조하였다. 시민들이 후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후원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갖게 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에 후원하여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자연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는 것만 받겠다는 피동성에서 시민들을 벗어나게 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능동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시민의 도움으로 시민을 위해 만들어 낸다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과 애착을 커질 것이다.

<인터뷰27. 프로그램 참여자 의식과 태도>

“시민들이 자신을 강의를 듣는 사람, 강의를 듣고 만드는 의식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를 지식의 소매상으로 여기고, 자신들을 이를 단순히 소비하는 소비자와 고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참여한 강의와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는 동학, 동지로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즉 시민교육프로그램에서 참여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후원하며 키워가는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6번 프로그램 진행자)

“시민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관공서보다는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본다. 즉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머물지 않고 시민단체로서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역할이 참여가 강화될 것 같아요.”

(1번 프로그램 진행자)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후원제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를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교육기관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영세한 기관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이끌어 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재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과 기관이 자립하기 전까지 시간적 압박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이야기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이 교육기관의 행정적 어려움을 도움으로서 후원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었다는 자신감이 증대된다.

<인터뷰28. 프로그램 운영 신뢰성 확보>

“후원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민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들이 많아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6번 프로그램 진행자)

6-9. (미래교육 대비)온택트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진의 역량 강화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교육환경은 점차 온라인 및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으로 변모할 것이다. 미래교육의 방법론적 핵심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의 확대이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모습에 민주시민교육이 발맞추기 위해 필요하는 것은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진의 역량강화이다.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란 운영진이 쉽게 온라인상에서 학습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습자도 자신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온라인 장비 및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장비와 플랫폼으로는 미래교육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29. 온라인 장비 확충 및 플랫폼 구축>

“온라인 영상강의 플랫폼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설비(데스크톱이나 태블릿PC, 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지원 단말기/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무선 와이파이 환경 등)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무선 환경이 구축 안 된 시민들도 누구나 접근의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의미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 프로그램 진행자)

“동영상을 탑재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의 구축,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최소한의 SNS(유튜브 등) 계정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번 중간지원조직 운영자)

또한, 온택트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좋은 장비와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20세기의 교수기법과 컴퓨터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운영진은 지금 필요로 하는 온라인 수업기법(쌍방향 의사소통, 영상제작 기술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쌍방향 수업이 기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중심의 전달식 영상 수업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있다. 오늘의 한계를 극복하여 운영진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예산의 여유가 있으며 미래교육에 대해 미리 준비해온 이들 기관을 통해 운영진의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인터뷰30.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운영진의 역량 강화>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실무자의 역량강화 교육 부분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교육 형태는 코로나19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존부터 일부 분야나 상황에서는 종종 쓰이던 것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규모로 증폭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있던 기관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상황변화에 대처해 수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줌(Zoom)교육’을 새로이 편성해 교육하고 활용하게끔 했지만, 당장에 익히고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번 중간지원조직 운영자)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7. 정책적 함의

7. 정책적 함의 :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역할, 구성, 특징

7-1.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역할 분석

1)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중간지원조직(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과 같은 형태로 비영리 단체 등이 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행정참여 확대라는 협치 패러다임에 따라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국가별로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을 필두로 EU의 중개지원 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영국의 엮브렐러 조직(umbrella organization), 미국의 인프라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등은 공통으로 ‘서로 다른 두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정병순, 2020).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관련 기관, 주민 및 주민 조직 간의 중간매개자(행정안전부, 2017)로,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중간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역별 주민 조직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재자, 조정자, 역량구축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내의 교육 활동이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그리고 정부와 이들 사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당국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사이에서 정부로부터 사업과 예산을 위탁 받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지원하고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당국에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정부와 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은 ‘중간조직(intermediaries)’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이라는 기능적 특성(김태영, 2016)을 가진다.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상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체들과 공공영역 사이에서 풀뿌리 주체들의 상향적 조직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정병순, 2020). 따라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주민 등의 공동체 활성화 주체를 연계·조정·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조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① 인적 자원의 육성 ② 자원과 기술의 중계 ③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④ 사업화 지원 ⑤ 경영 컨설팅 ⑥ 홍보 및 마케팅 ⑦ 정책연구 제안 ⑧ 심사 및 인증지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김진솔 외, 2018).

[표 1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기능	설명
인적 자원의 육성	당사자 조직 및 자치기구,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적 자원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양성
자원과 기술의 중계	주민 조직이나 단체, 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 기술, 자원의 중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및 주민 조직 등 운영 주체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화	지원 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및 기업(단체)설립 지원
경영 컨설팅	체계적 사업의 진행 또는 단체의 활동을 위한 경영 회계 및 마케팅 등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진행 및 운영에 대한 홍보 확산 및 마케팅
정책연구 및 제안	지역 자원의 조사, 지표를 활용한 정책연구 및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제안
심사 및 인증지원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출처: 김진솔 외(2018). p.188.)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자, 조정자, 역량 구축자와 같이 ‘지원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역할	설명
중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자 - 정책 모니터링, 피드백 - 정책 제안
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 이해관계자 간 자원의 연결과 조정
역량 구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성원들 정보공유와 훈련 - 조사연구 - 상담 및 컨설팅

(※출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10차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자료집(최준규, 20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고 시민사회의 공공재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과 시민사회의 포괄적 교량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장수찬, 2013).

3)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분류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운영 주체나 서비스 형태, 설립 형태, 활동영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유형에 따라 기능과 업무가 나뉘고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실행사업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제시된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공공영역,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관에서 설립,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표 14]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 기준	내용	
김재현 외 (2011, 2013)	운영 주체	관 주도형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민간주도형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
		위탁형	정부나 단체가 설립하지만,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
김태연 (2015)	서비스 형태	종합지원형	정부 부처, 행정,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광범위하게 활동
		특화분화형	환경, 복지, 예술, 농업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
박종석 (2017)	설립 형식	공설 공영	행정 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설립
		공설 민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만설 민영	시민사회영역이나 민간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
홍동욱 (2018)	활동 영역	광역형	전국 또는 광역단위의 지원 활동 수행
		지역형	지자체 또는 구, 면 단위에서의 지원 활동 수행

(※출처: 김진솔 외(2018). pp.190-191. 수정 정리)

4)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연구대상으로 공공영역의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5·18 기념재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시민자유대학,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등 총 다섯 곳을 선정하였다.

공공영역의 중간지원조직 중 하나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근거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이다. 진흥원은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평생학습 체제구축, 광주형 평생학습 실천, 시민 맞춤형 생애 재설계 지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광주평생교육 정책 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간/공공영역 역량강화, 광주시민대학, 자치구 평생학습 도시 지원사업, 광주 문해교육센터 운영, 평생학습 일자리 플랫폼, 인생재설계 평생학습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인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대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이 모여 설립된 기관이다. 재단은 2005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인 '광주 민주, 인권, 평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은 크게 기념사업, 5.18 문화예술사업, 교류 협력사업, 교육사업, 학술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지역 인문학센터 노뚝돌(이하 '노뚝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산하단체로 연구 성과의 확산, 시민과의 소통, 지역문화의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추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동선의 지향과 실천을 통한 더불어 삶의 일상화를 목표로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별 체계적 인문교육프로그램, 지역 수요 맞춤형 가족 소통, 치유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고 지역인문활동가 및 협력 기관을 잇는 인문학플랫폼, 인문허브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뚝돌은 매년 차이와 차별, 젠더, 폭력,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 중요한 인문적 사유와 의제를 담고 있는 문학철학·역사·문화 관련 정기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주를 아우르고 있다.

<시민자유대학>은 민간영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광주에서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교육하는 열린 대학을 표방하며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인가 대안대학이다. 광산구와 인문도시연구원이 '인문 자치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시민자유대학은 시민참여와 호응을 끌어내며 성공적인 민관협력 인문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자유대학은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매년 봄, 여름, 가을학기 개강을 통해 학기당 평균 8주 동안 동서양 고전, 서양 중세철학, 과학기술, 예술창작 워크숍 등을 주제로 주중 3강좌, 주말 2강좌 등으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역시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한 아이를 키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명제를 광주에서 구현하기 위해 광주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들이 지난 2019년 창립한 단체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2016년부터 광주지역 여러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동체 활동을 해오다 2019년 1월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9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출범하게 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포럼은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민주적인 참여 과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및 정책개발, 학습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7-2.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프로그램 현황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5개 중간지원조직 중 대표적인 두 곳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지역인문학센터 노릇들이다.

1)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광주시민대학’ 사업을 2018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학(민주, 인권 중심 시민의식 관련), 인문학(문학, 역사학, 사회학, 문화예술 등), 광주학(지역 문화유산, 역사 등), 공동체(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인간관계 등), 미래학(4차 산업혁명 관련) 등 교육내용에 따라 카테고리를 과목 형태로 분류해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고를 통해 지역 내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을 모집하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운영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15>와 같다.

[표 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기관명	과목	과정
1	인권 감수성 UP! 자원봉사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시민학	단기 과정
2	삶의 맛, 삶의 멋 -행복한 인문학 brunch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인문학	
3	<공부하는 엄마들> 예술-시-희곡으로 삶을 만나다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광주학	
4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공동체	
5	찾아가는 광주학	(사)한국인권교육원	인문학	
6	공간으로 읽는 광주학	광주전남연구원	광주학	
7	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	광주시민인문학 협동조합	공동체	
8	직장 내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치유 그리고 의사소통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공동체	

연번	프로그램명	기관명	과목	과정
9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교육 II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시민학	장기 과정
10	여성 기획자 학교 <평등한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11	인문학으로 설계하는 민주·인권의 광주정신	광주전남작가회의		
12	함께하는 인문학<人紋도시, 人文도시>	전남대학교인문대학		
13	무등산무돌길문화대학 광주정신 함양 인문학 역사문화 생태탐방 교육	(사)무등산 무돌길협의회	인문학	
14	삶의 치유로서의 인문학	카페필로소피아		
15	학소골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학소골을 디자인하다'	빛고을종합 사회복지관	공동체	
16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미래학	

또한, 진흥원은 강의주제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공모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과정 당 성인 30~40명을 정원으로 진행되며 강의형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한편 활동형이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진흥원 직접 사업인 ‘찾아가는 시민교육’이 있다. 진흥원에서 자체 양성한 ‘시민교육 나눔 강사’를 활용한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특이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찾아가는 광주알기 답사’ 프로그램은 시민 10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탐방을 신청하면, 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6개 탐방 코스(광주 정신의 길, 시·문학인의 길, 근대역사문화의 길, 민주·인권·평화의 길, 무등산 의향 길, 세계지질공원의 길 등) 중 한 곳을 탐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버스임차 등의 비용은 진흥원에서 일체 부담한다.

다른 유형인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은 광주정신, 공동체, 문화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민교육 나눔강사를 매칭해 학교로 파견하는 형식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개발한 ‘두근두근 광주알기 카드게임’과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내용적 요소를 먼저 강의로 진행하고 게임을 활용하여 복습하는 형태의 활동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들은 문학·철학·역사·문화를 횡단하는 다양한 주제로 2018년부터 매년 20여 강좌(250여 회)를 개설하여 시민의 인문 삶과 인문적 사유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매년 10월 말에 주최하는 <<인문주간>>에는 가족과 폭력을 주제로 한 <가족영화제>와 책을 매개로 시민과 시민을 잇는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 내 인생의 책, 내 삶의 한 구절>, <시민인문포럼> 등을 개최하여 인문학자와 인문학활동가, 시민이 연대하여 만나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노드들은 KCTV 광주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연대하여 기획한 시민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인문학’을 통해 2019년에는 ‘가족 커뮤니티와 상상의 공동체, 호남과 호남사람들, 젠더로 여는 평등 세상, 자율적 시민과 국가’를, 2020년에는 ‘기억과 사건, 아름다움과 추함, 노동과 휴식, 지역과 경계’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왔다. 또한 <문화와 예술로 읽는 5.18의 기억과 전향(前向)>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문학/미술/음악/사진으로 영역화하여 다시 비춰보고자 하는 시도도 해왔다.

[표 16]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들 프로그램 현황: 인문의 숲-인문적 삶과 상상의 공동체

분류	연번	강의자	강의주제
가족 커뮤니티와 상상의 공동체	1	류○향	가족의 의미-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2	박○선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례-왕가의 구성원리
	3	한○승	19세기 서울-육망과 가족의 거리
	4	고○이	2018년 사회조사에 나타난 한국 가족관계
	5	추○희	‘교차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가족-여성·청소년·청년
	6	강○혁	가족 안의 타자들
	7	오○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법
	8	김○우	양극화 시대, 도래할 공동체에 대한 한국문학의 성찰과 상상
	9	김○영	세잎클로버와 초록색의 나라, 아일랜드와 가족 이야기

분류	연번	강의자	강의주제
호남과 호남사람들	1	이○원	기억과 의미: 포스트 모던한 건축
	2	조○현	호남, 천년의 역사
	3	조○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과 광주의 식민잔재
	4	조○현	단일민족국가 신화와 다문화 사회
	5	박○희	눌재訥齋 박상의 학동 분수원 이야기
	6	고○혜	송순宋純, 호남의 자연에서 길을 묻다.
	7	김○삼	아! 김남주, 전사에서 시인으로
	8	이○준	고봉高峯 기대승의 마지막 1년
	9	이○준	광풍제월光風霽月的 꿈과 좌절된 현실 - 소재처사 양산보
	10	김○호	하서河西 김인후와 난산통곡, 조선을 울리다
	11	장○동	다산茶山 정약용, 외부자의 시선으로 호남을 그리다.
	12	김○경	광주·전남 제1세대 서양화가들
	13	김○경	해방 전후 목포와 광주 화단의 양상
	14	최○준	화랑과 비엔날레, 그리고 ACC
	15	최○준	인터넷 화면구성과 표현회화 원리
페미니즘과 젠더: 젠더로 여는 평등세상	1	김○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이해
	2	김○례	여성운동의 역사
	3	서○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4	장○○나	가족의 다양성과 비혼 여성의 삶
	5	김○○내	낙태죄를 넘어 재생권으로
	6	박○경	미투운동의 전개와 과제
	7	김○희	성 산업과 성매매 여성
	8	김○희	씨네 페미니즘 운동-페미니즘 영화의 등장과 전개
자율적 시민의 탄생과 국가	1	김○호	동학, 세상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각성
	2	김○국	해방과 분단, 민족국가의 상상과 좌절
	3	김○국	'상상된 공동체',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4	김○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배와 저항의 이중주
	5	김○송	5월 항쟁과 시민의식
	6	박○섭	광주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7	김○성	개인의 탄생과 개인주의의 역사
	8	박○수	소셜 미디어 시대, 언론 바로보기

노릇들의 현재 정기강좌는 주로 강의형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획프로그램, 특히 미디어 인문학은 강의와 시민의 참여 활동을 함께하는 혼합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문주간에 주요행사로 실시하는 <책으로 사람을 잇다>와 <시민인문포럼>은 시민이 주도하는 활동형 프로그램이다.

7-3.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의 지역성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민대학>은 민주시민의식 및 광주정신 함양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 및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운영모델을 도출하였고 연차별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민대학 교육과정 중 핵심교육과정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으로, ‘시민학, 인문학, 광주학, 공동체, 미래학’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역성을 띠고 있는 카테고리는 ‘광주학’(지역 문화유산, 역사 등)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활동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시민교육> 내에서 ‘광주정신’의 주제가 지역과 연계된 요소를 다루고 있다.

[표 17]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프로그램 과목 카테고리

구 분	내 용
시민학	민주, 인권 중심 시민의식 관련
인문학	문학, 역사학, 사회학, 문화예술 등
광주학	지역 문화유산, 역사 등
공동체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인간관계 등
미래학	4차 산업혁명 관련 등
기 타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또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www.gie.kr) 내 광주시민대학-온라인 캠퍼스에 수강신청, 학습이력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 내 명사 특강, 공동체, 주민자치 교육 등의 강좌를 자체 제작 또는 타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녹화,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캠퍼스에 탑재하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마련하였다.

[표 18]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온라인캠퍼스 강좌 리스트

번호	분류	강좌명	강사명
1	인문학	문학이 인생에 주는 의미	송○기
2	인문학	삶의 철학으로서 인문학	백○균
3	광주학	5.18과 항쟁공동체	김○봉
4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도시와 인문학> - 하반기	류○한 외 7인
5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도시와 인문학> - 상반기	류○한 외 7인
6	기타	20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참여기관편)	김○희
7	기타	20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참여자편)	김○희
8	기타	주민자치 & 주민주권의 실현	장○찬
9	기타	주민주권과 자치	김○수
10	기타	주민주권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곽○근
11	기타	금호1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박○순
12	기타	주민세 연계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김○호
13	기타	고양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정○화
14	기타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김○민
15	기타	청양읍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김○옥
16	미래학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직업과 트렌드	장○별
17	미래학	미래의 경쟁력 빅데이터	송○정
18	시민학	다정다감 1(선거참여)	박○령 외 5명
19	시민학	다정다감 2(시민교육)	성○섭 외 3명
20	시민학	다정다감 3(체험·사례)	김○년 외 3명
21	시민학	다정다감 4(민주주의와 나)	김○신 외 8명
22	시민학	다정다감 5(참여·실천)	박○진 외 7명
23	시민학	다정다감6(역사속 민주주의)	전○재 외 3명
24	시민학	다정다감 7(공명선거만인원)	김○곤 외 4명
25	시민학	다정다감 8(민주주의의 씨앗)	강○래 외 4명
26	시민학	다정다감 9(선거이야기)	신○정 외 4명
27	시민학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복지상식	이○교
28	공동체	공동체의 뿌리는 십시일반에서 나온다	김○덕

번호	분류	강좌명	강사명
29	기타	글로벌 시대의 음악하기	최○준
30	광주학	남도문화와 전통건축	천○엽
31	광주학	한국미술의 보물창고, 남도	오○희
32	광주학	남도의 문화유산	조○열
33	광주학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	임○진
34	시민학	불교와 현대사회	이○표
35	미래학	미래사회와 과학	문○찬
36	인문학	문학의 유용성: 'Dulce et Utile'(달콤한 지혜)	나○경
37	인문학	분권시대를 여는 철학의 물음Ⅳ	박○용
38	인문학	분권시대를 여는 철학의 물음Ⅲ	박○용
39	인문학	분권시대를 여는 철학의 물음Ⅱ	박○용
40	인문학	분권시대를 여는 철학의 물음Ⅰ	박○용
41	인문학	몸이 철학을 말하다Ⅳ	노○진
42	인문학	몸이 철학을 말하다Ⅲ	노○진
43	인문학	몸이 철학을 말하다Ⅱ	노○진
44	인문학	몸이 철학을 말하다Ⅰ	노○진
45	인문학	시와 생태적 감수성	나○덕
46	광주학	5.18 민주항쟁과 광주정신	최○태
47	미래학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오○근
48	인문학	내 마음 속 나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석
49	인문학	동양 회화의 맛(美)과 즐거움(樂)	조○식
50	광주학	사랑, 위로, 예술의 마을 '양림동'	한○원
51	인문학	몸의 철학 - 성장으로서의 문화	노○진
52	공동체	마을 갈등을 공동체의 참여로 해결한다	민○식
53	인문학	경영에서 배우는 지혜	정○창
54	인문학	공장의 역사 - 산업기술 문명의 과거와 현재	이○석
55	광주학	아시아 문화 허브를 지향하는 광주-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김○석
56	인문학	중년 여러분 힘드시죠? : 앞선 4050에게서 희망을 듣다	오○남
57	공동체	아시아공동체론	황○경

번호	분류	강좌명	강사명
58	인문학	21세기 나의 인생 : 세 번의 30년을 준비하라	오○남
59	미래학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러너십	김○준
60	인문학	세상을 바꾼 5인 5색 스토리	오○남
61	인문학	글로벌프라이미 : 세계를 향해 꿈꾸다	임○재 외 4인
62	광주학	호남 최초 대한민국 양복명장에게 듣는 광주전남 패션이야기	전○원
63	광주학	광주비엔날레와 지역친화전략	박○우
64	광주학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황○년
65	인문학	소나무의 불편한 진실	김○수
66	미래학	지(知)테크	강○석
67	인문학	라틴아메리카, 깊게 보기 (콜럼버스의 인종의 날에서 안데스의 '행복론'까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68	인문학	라틴아메리카 넓게 보기 (고대문명에서 미국의 라티노까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69	인문학	새롭게 보는 동양고전 : 주역	임○우
70	인문학	새롭게 보는 동양고전 : 노자	신○근
71	인문학	새롭게 보는 동양고전 : 논어	이○동
72	미래학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무과정-2	최○문
73	미래학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무과정-1	최○문
74	인문학	석좌교수강좌: 행복을 위한 세가지 키워드	오○남
75	시민학	글로벌 매너	박○실
76	시민학	사회생활 매너	강○선
77	공동체	마을공동체 기업의 이해와 실제	김○현
78	인문학	대학로인문예술아카데미: 음악, 미술, 사진 속에 담겨진 4050세대	조○범
79	시민학	공감특강: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	서○화 외 7인
80	광주학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	노○태
81	인문학	이야기 문학과 삶	조○진
82	인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박○용
83	광주학	남도 김치와 음식문화	김○현
84	인문학	감성으로 살아가기	문○태

노들들은 KCTV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미디어인문학 ‘인문의 숲, 인문적 삶과 상상의 공동체1’(2019년), ‘인문학의 가장자리-빛장공동체에서 트임의 공동체로’(2020), 마을시민과 함께 꾸리는 ‘인문마을’ 등을 통해 구상과 실천이 지역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들들이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시민주체의 인문마을을 조성하는 데 공동 실천자, 토대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인문마을’ 프로그램은 광주·전남 지역에 작은 인문마을(human village)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인문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이 인문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란 구상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디어인문학>에서는 매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작·방송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가족 커뮤니티와 상상의 공동체, 호남과 호남사람들, 젠더로 여는 평등세상, 자율적 시민과 국가’, 2020년에는 ‘기억과 사건, 아름다움과 추함, 노동과 휴식, 지역과 경계’로 영역을 나누어 방송하였다. 또한 노들들에서 진행하는 연간 25개 가량의 다양한 인문학강좌 내에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강좌들은 총 240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연간 4,500여명 참여한다.

7-4.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사례 분석

민주시민교육 최전선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성패 요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먼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내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교류를 통해 평생교육 사업 및 광주광역시 비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공동체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전반적인 도시 비전에 맞춰서 자치, 인권, 문화, 복지, 재생, 사회참여 등 분야와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영역과 역할을 찾아 다양한 분야·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구심점으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광주 시민교육 특화모델을 운영 및 확산하고 있다. 양성된 시민교육 활동가(현재 명칭: 시민교육 나눔강사)는 매년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 곳곳에서 지역학, 공동체 등의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나눔강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진흥원에서 특허를 보유한 광주알기 게임(카드게임, 보드게임)과 시민교육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흥미롭게 접근하게 한다. 또한 나눔강사들은 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광주알기 답사’ 코스를 직접 현장에서 해설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 진흥원에서 양성한 나눔강사를 교육수요처인 학교와 매칭하여 실제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된 시민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부분이 타 기관의 사업과 가장 차별화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찾아가는 시민교육’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약점은 ‘시민교육 활동가’ 양성 이후 활동가 관리, 역량강화 기획 및 운영, 교육기관과 활동가 간 매칭, 활동비 및 버스임차비 등 지출업무, 운영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실무자의 업무과중을 초래하여 업무에 따른 행정처리 간소화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노동들의 사례를 보면, 정기강좌와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민을 대상으로 글쓰기 모임(<글쓰는 삶>)과 책읽기 모임(책으로 통하다 <책통

(冊通)>을 만들어 인문마을과 연계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글쓰기 모임-책읽기 모임 → 인문마을[네트워크] → 인문도시” 체제는 궁극적으로 인문 마을들이 서로의 삶과 살림살이를 배울 수 있는 인문마을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이는 해마다 인문마을 백서를 통해 기록되어 인문도시 구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노뚝돌은 이러한 과정 마디마디마다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기획·제시하여 인문마을, 인문도시가 새로운 결을 형성하는 데 토대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의 다층위적 영역을 구체화하여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풀(pool)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의 강점이다. 문제는 인문학 중심 이론 연구와 강의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인문활동가, 실천가는 부족하여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 부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자와 시민 사이를 이으며 시민 사회의 허리역할을 하는 인문활동가, 인문코디네이터(coordinator), 인문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7-5.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의 방향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참여자의 삶과 괴리된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란 무엇일까? 향후 우선 지원해야 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 내용부터 형태와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토대이념과 현실의 시의성 고려

민주시민교육은 먼저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판,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관계의 인문학>, 그리고 인간관과 세계관의 바탕을 이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정의, 자유와 평등, 차이와 차별,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진보와 보수, 전체와 개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역사 등’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뤘던 개념과 이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의성(時宜性)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이 시대의 시민은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을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과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쟁점화된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흐르는 시공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삶의 행태에 대해서도 열린 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 포용국가와 복지국가, 국가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과 공존의 문제, 장애학(disability study)-정상과 장애의 문제, 소수자 인권, 난민, 폭력(가정 내 폭력, 사회적 폭력, 국가폭력 등)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 노동과 휴식(노동권과 휴식권), 성원권(membership), 저항권, 자연권 혹은 생태권, 동물복지와 동물권리, 환경과 생태의 문제 등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참여와 실천의 토대 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은 역사적으로 우리 삶의 토대를 이루어 온 기본적인 개념과 이념에 덧붙여,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지역의 문제, 그리고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삶의 행태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인터뷰31.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시의성>

시의성을 놓쳐선 안 된다는 말은 첫째는 기본적인 이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다. 예컨대 폭력문제를 보면 가정폭력, 사회폭력, 국가폭력, 성폭력 등은 지금 내가 사회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가해폭력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역(逆)진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민주시민교육의 주제가 되는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연령별, 세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나 ‘사랑’ 등의 개념도, 언뜻 보면 이념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사랑은 끊임없이 인간을 배반한다.”와 같은 말속에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형제간의 우애’의 개념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성 친구’의 개념도 학생들에게는 어른들이 말하는 ‘성적인 대상 또는 결혼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더 친하고 알고 싶은 친구’의 개념으로 배우는 이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학자에게 말하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민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굳이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정의내리지 않더라도 “내가 나인 것”이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맞게 교육하는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이념도 교육하는 대상과 방식에 따라서는 그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2) 참여형 주권자 교육

2019년 선거연령 조정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청소년 대상 참정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다.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참정권 교육은 시민으로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당한 관심과 책임,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선거참여 절차를 넘어 공공선을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철학적 힘을 길러내는 교육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터뷰32. 민주시민교육 의미-참여형 주권자 교육>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 자체가 참여자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성숙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권 행사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에 집중하며 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교육, 배움과 일치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학생의 경우) 교과서 안에만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 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민주적 의사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며 실천해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이를 점점 반복적으로 실천해나가면 민주시민의 주권 발신과 수신에 능동적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인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배움을 실천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적 담론의 과정에 참여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며, 시민의 관점에서 그 과정을 성찰해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5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민주시민의식이나 참정권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꼭 그것들을 내용적으로 다뤄야만이 민주시민의식 교육, 참정권 교육인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에 노출됨으로써 내용적인 것과 방법적인 것들을 체득하고 더 나아가 과정을 성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 것이다.

3) 준비된 참여자 효과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경우 자기 욕구가 강할수록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즉, 준비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일수록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직 교사 연수의 경우 조직적으로 필요에 의해 기획된 연수와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집 방식에 따라 참여한 교사들이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전자처럼 개인이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한 경우,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거둔다는 보고가 많았다. 예를 들어 5·18 기념재단에서 5·18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은퇴 이후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습자의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다만, 단순 모집을 통해 우연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도 일부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의 요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의 질이 높을 경우에는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순례프로그램의 경우, 장소와 함께 공간에 얽힌 맥락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준비되지 않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그 차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혐오로 발전해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를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의심해보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일상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선택과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 통합과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기타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을 향후 우선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풍부한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이점이 있다. 지역기반 시민교육은 지역민으로서 시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 시민은 지역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며, 또 그 지역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와 시민 개개인의 관계를 주의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나아가서 지역-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가 처한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에 대한 감수성, 중요성에 대한 공감능력을 길러내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순한 통일 교육을 넘어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 시대 상황에 비추어 코로나19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은 생활세계나 생활정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적 의제에 대한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은 공적 의제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합의, 실제 참여와 실천으로까지 연결 되어야 한다.

7-6. 프로그램 만족도와 성공 유형 분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 중 기획의도 달성이 성공적이거나 참여자의 만족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특정한 방식이 있는가에 대해, 담당자들은 교육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체험형, 활동형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이러한 유형이 오히려 학습대상자를 모집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참여 유인 효과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참여자 유인과 홍보효과에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프로그램 방식이나 형태보다는 강사의 인지도이기 때문이다.

강의형, 혼합형, 활동형 등의 운영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도 있었다. 오히려 강의의 형태보다는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의사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질과 참여자 만족도를 고려할 때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방적 대중 강연보다는 강사와 참여자 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용이한 소규모 강연 형태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3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강의형, 혼합형, 활동형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참여방식이 서로의 관점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 특히 진행자와 참여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5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 역시 단순히 운영방식보다는 대체로 강사나 학습자의 태도, 수업 방식에 따라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동들의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꼽는데, 이는 본인들이 읽었던 책 중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을 쓰고 그에 대한 5분 토크를 하는 형태이다. 단순히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학습자에게 ‘당신이라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직접 실천은 아니지만 일종의 실천연습으로, 이 연습이 계속되면

실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한 수업 방식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몸과 정신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수업 방식은 교육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 유형에 따라서 상호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답사 형태의 교육은 당연히 ‘참여형’ 수업일 수 있지만, ‘강의형’의 수업이더라도 강사의 수업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끌어내려고 하는 강사도 있는 반면, 일방적으로 강의만 진행하는 강사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강의를 듣는 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말하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이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같은 수업에서도 다른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중간조직 입장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강의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식과 더불어 기술, 태도를 알리려면 단순히 강의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였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립한다고 하면 적어도 단순 강의형이 아닌 혼합형 내지 활동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활동형 수업으로 게임이나, 현장 답사 등의 방식이 시민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적절하게 녹아져서 진행이 되어야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고, 결국 시민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천적 요소가 가미된 활동형 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이 단순 관념을 배우는 학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는 학습자가 행위나 실천을 통해 어떻게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마지막 지향점은 민주시민의식 ‘실천교육’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우, 가장 큰 성과는 마을 주민들과 학교 구성원 등 이질적인 집단이 만나서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마을 주민의 경우, 학교 안팎의 차이, 서로의 차이를 섬세하게 읽어내고 존중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교사의 경우 학교 밖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마을과 사회의 움직임, 현안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요소 중 첫 번째로 꼽힌 것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주도방식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활동형만이 일률적인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7-7.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사례를 통한 필수 보완요소

1) 공공기관의 개방적 자세 (봉사정신과 책임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원활하지 않은 요소로 공공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한 곳이 많았다. 인문학 강좌를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역할수행 태도에 따라 강좌 프로그램의 질과 관계없이 운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무엇보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기관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봉사정신과 책임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과 사회를 위해 공공선의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는 일방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협조적이고 열린 태도로 진행해야 할 쌍방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적 기관은 지금보다 더 개방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역량 강화 기회 및 인력풀 제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의 한계점으로 참신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기획력 특강과 기관 관계자 간의 소통 자리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시민교육 방향을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사업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교수 등 학자들이 이론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시민사회 단체 실무자의 경우 실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고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풀(pool)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3) 교육 및 학습의 연결성 확보

교육 프로그램 중 기초나 입문에서 시작해서 나아가 실천의 영역에 닿을 수 있도록 장기적, 연속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에서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이 부분의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심화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상 계열성, 연결성이 필요하다.

7-8. 중간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역할

1) 기관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시스템

중간지원조직에게 바라는 주요 역할에 대한 응답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와 소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즉,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인식의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상호성에 근거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지역사회가 생각보다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가 겉으로는 개방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계열화되어 있어서 유형이 비슷하면 소통이 되는데, 조금 멀어지게 되면 범주 외 시민사회 단체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과평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와 공유는 중요하다. 자체 평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 또는 실패사례의 공유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뚝들이 광주·전남 인문지도 구성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인문교육 집단들이 행하는 다양한 강좌와 행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관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시민인문교육집단은 재정과 공간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인문지도>를 매개로 총체적 측면에서 홍보하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중 ‘민주시민교육의 허브 구축’과도 연관되는 내용이다. 즉, 지도 형태와 같이,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 강좌, 행사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화하고 프로그램 기획자, 진행자, 참여자, 교강사, 그리고 시민과 각종 기관에서 구축된 DB를 활용할 수 있게 엮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강점·약점을 파악해서 유관기관들을 네트워킹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관의 성격이나 역량에 따라 어떤 기관은 기획력이 강하지만 실행력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이와 반대의 상황일 수 있다. 이 때 여러 접점을 마련하는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별 특성을 파악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연결해주면 기관 간 강점과 약점을 상호보완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과정이 정착되면 이후에는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각 단체나 집단별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유명 강사, 시의적절한 강의 주제에 대한 고민,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터넷 플랫폼, 전국적인 강사 풀(pool), 타 기관(단체)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홍보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2) 공간의 확보 및 관리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광주 곳곳에 많이 있지만 내실 있게 구성된 곳, 차별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5.18 기념재단에서 5.18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5.18에 특화된 기관도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민주시민교육 운영단체들이 교육공간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들에서 이런 교육 공간과 장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구축된 공간적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투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종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쟁지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때 교육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육장소로 활용되는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은 공간 대여에 수반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 부분을 중간조직 혹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곳곳에 청소년 놀이 공간, 강의 공간, 실천 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누구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선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 내 다양한 방식(강의형/활동형/혼합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대여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공간들을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주요 거점에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마을마다 노인정이나 작은 도서관 등 유휴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이 없어 공간이 있어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역 내 유휴공간들에 대한 정보를 각 시민단체들에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거점의 공용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이용자와 매칭하고 관리하는 인력이나 역할이 중간지원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는 기관 간 네트워크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예산과 인력 지원 및 관리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인문교육, 정치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 범주화하여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이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활동가들이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창의적인 프로그램 아이템과 사업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 내에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공간과 예산, 인력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활동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근로조건 문제이다.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이 신분이 보장되는 형태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이나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최준규, 2020).

예산과 인력은 곧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과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순례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지만 참가 인원 대비 많은 공력(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에서 프로그램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원 및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7-9. 중간지원조직에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정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에 다양한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에 부과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에 각종 지원이 제공되고 그와 관련된 여건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중간 지원조직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과 법적 근거 마련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기능과 특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 조직지원 등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34. 중간지원조직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역할, 권한을 가지려면, 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명확하게 어떤 곳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 다라는 식의 공신력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올해 4월 공표가 됐다. 조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수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에 덧붙여 ‘민주시민교육 센터를 어디서 담당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면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하는 그곳이 권한을 발휘하거나 추진하는데 역량이 결집되거나 하는데 있어서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선행연구에 제시되었듯이, 중간지원조직이 민관협치 기구로서 시민단체와 시민의 지원자·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근거를 조례와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전에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박민서, 2019).

한편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물리적, 제도적 뒷받침은 지자체장이 교체되거나 그들의 마인드에 따라 즉각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조직이 이를 담보하기에는 지속성, 연계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혹은 ‘시장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완벽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는 짧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았다. 시민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기관과의 협업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관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행정 규제와 절차에 얽매어 활동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이 확보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관과의 긴장감이 존재하지만, 적정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 정부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과 정부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법이나 조례 등을 통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예산, 회계 등 운영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실행 등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정책적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적인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사용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예산의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국가의 돈에만 기대지 않고, 자력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재원의 다양화는 곧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자체조달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예산 이외에 정부 사업을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수탁하여 운영한다면 정부와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반응성을 갖추기 위한 지원과 정책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시스템과 현장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직된 관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어떤 사업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섬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직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실행 주체인 프로그램 운영집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주체인 행정기관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시민사회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에서 민주시민교육 저해요소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낮은 정책적 반응성을 꼽은 만큼,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반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직접 맞닿는 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단체들의 요구 즉 시민의 요구가 자유롭게 되먹임 되어 개선되는 환류(還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하달하는 일방적 하향식(top-down) 의사전달 방식으로는 운영단체들의 요구 수용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피드백 구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적 구성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인적 구성(출신, 선발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언급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 영역(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법교육, 비폭력 평화교육,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경험(기획, 연구, 교육, 행정지원 등)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중간지원조직에 입사한 경우 현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시민교육 사업 주체들에 대한 이해, 민주 시민교육 운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그들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현장 경험, 행정력, 그리고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인터뷰35.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조건>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해야한다. 아는 만큼 보일 뿐 아니라, 아는 만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지원조직 스스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6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현장과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 행정 전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히 현장 전문가가 많아야 한다고 본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과 비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의 특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기획하고 풀어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연수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특성과 활동을 잘 아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지원이 더 중요하다. 덧붙여 예산 행정의 법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지원조직 내부에 많이 근무하여 시민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면 한다.

(5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그 지역의 고민을 민주시민교육 주제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지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터뷰36.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선발방식>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직이며, 특히 지역민의 주체적 삶의 고민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발방식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7-10.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운영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정부로부터 정책집행을 위탁 받아 시민단체들에게 예산을 교부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자 성격을 띠고 있다.

1) 사업연계 형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기관 간의 사업연계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사업비 재원이 시비에 해당하며, 업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정가치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상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은 자생적으로 발생, 운영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며, 기획형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소요경비를 해당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제공 집단인 중간지원 조직과 공동수행집단인 행정기관 간의 유연하고 원활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2)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도움과 어려움

행정기관과의 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도움으로는 예산, 공간, 행정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사업 진행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인력 부족, 예산, 공간의 문제가 꼽혔다. 예산은 사업진행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인 동시에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 예산 지원이 일관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정권은 엄밀히 5.18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다른 정권은 이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5.18의 의미를 확산하는 사업과 교육에 대해 폭넓게 진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며 예산을 지원하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행정기관 스스로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지원이 아닌 관리, 감독, 지시, 통솔하고 있다고 스스로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았다. 행정 규제와 절차에 얽매게 되면 활동이나 프로그램 역시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산지원과 동시에 과도한 간섭이 작용하게 되면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3) 행정기관과의 관계적인 측면

행정기관과의 관계적인 측면 역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정기관과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경우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계가 원활치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무관심할 경우, 시민 참여도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지방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역할을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새로운 사업들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터뷰37.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 관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믿어라, 그리고 믿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다. 지원하면서 간섭하게 되면 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순치 교육이다. 국가가 포섭하게 하는 것은 영역 별로 구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너희 맘대로 해봐, 실패해도 좋아. 그러나 탄젠트만 하지 마라.’ 그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또한 행정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시민교육 운영과정이나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담당 공무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교부되면 행정기관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간섭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또한 사업을 계획한 방향으로 추진하기까지 담당자를 추가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인터뷰38.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 관계-공무원 이해>

‘담당 공무원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을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그 공무원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시민교육 사업 주체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시민교육 운영과정이나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걸 중간지원 조직에서 하라고 했을 때 뭔가 명확한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시한다든지, 믿지 못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방식들이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따라서 행정기관과 의견이 충돌될 경우, 민주적인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열린 자세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행정기관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의 삶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이 시혜자와 수혜자, 주체와 대상, 주관자와 보조자라는 위계적 구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조직에 대한 믿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원활한 사업 진행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4) 행정기관과의 이상적인 관계상(像)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행정기관 간의 이상적 관계상은 무엇일까. 우선 두 기관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이전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 수행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이후에 서로의 역할에 대한 가시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뷰39. 중간지원조직의 위치>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시청이나 공공기관은 지원기관이지 관리자가 아닌데,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인식 자체가 우린 시민에 대해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중간지원조직은 끊임없이 지원하는 기관이지 누구를 거느리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통솔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시청 직원들은 통솔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하나는 유기적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가를 알 때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모르면 소용없을 것이다.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은 단지 예산을 주고받는 수직적 갑을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로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기성 사회의 위계적 구조의 부당한 간섭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구조 전환’을 제시했듯이, 중간지원조직이 행정 절차에 얽매어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행정 조직 역할에 그치거나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건강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분담하고 그 역할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때, 사업의 성과는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7-11. 중간지원조직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와의 관계

1) 사업연계 형태

중간지원조직과 프로그램 운영단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기관 간의 사업연계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영역의 경우 주로 기관 간 연계사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기관 특성상 공모보다는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2) 운영단체와의 성공실패 사례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단체들과 진행한 사업 중 성공적이었던 사례로는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성과공유회 등을 통한 정보공유를 꼽았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인 중간보고회와 결과보고회, 연말 성과공유회 행사를 통해 참여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과 개선점, 이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러한 내용을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한 실패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업 진행 단계에서 어려웠던 사례로는 운영방식이 주로 강의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식, 기술, 태도를 각각 따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민주시민교육 추진 이후 자발적 학습모임(동아리)을 결성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의 한계를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기관에 따라 학습 이후의 학습모임이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후관리 성과를 필수성과지표로 포함시키기도 하나, 학습자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후속활동으로까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 관리나 참여 유인이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에서 민간 운영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된 운영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사용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점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꼽았다. 중간지원조직 역시 시 출연금을 참여기관에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내부 강사비나 사업기획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지만

각종 감사와 예산지침 준용 등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으로 참여주체 즉, 운영단체들의 참여의욕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들과 증빙서류들로 인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행,재정 지원의 핵심 전제로서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3) 운영단체와의 관계적인 측면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운영단체와의 이상적 관계상(像)은 무엇일까. 담당자들은 중간지원조직과 시민단체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가 되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인터뷰를 통해 기관담당자들은 중간지원조직이 노동, 인권, 평화, 통일 등 각 분야에 주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들을 펼쳐가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거점으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문화의 대응과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력하게 지향하면서 미시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특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를 의제화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시민들의 조직화 된 목소리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목소리가 조화롭게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공적의제와 자신의 생활세계를 결정하는 모든 정치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그 참여를 철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이 될 수 있다(박민서, 2019). 중간지원조직의 본질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민-관, 관-관간에 시너지가 작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쇄적 성향을 띠 수도 있겠지만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중간자로서 이러한 기관/단체들을 연계하여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운영기관/단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충돌되지 않게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상호 충돌되지 않는 업무범위의 명확한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원배분을 행정에서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원은 중간지원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운영기관/단체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중간지원조직은 연구를 통해 운영모델, 매뉴얼, 교수법을 개발하고 운영기관/단체를 위해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영역을 존중하고 이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중간지원조직은 직접 세부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즉 권력화 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은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각 조직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터뷰40.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기성 단체 존중>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은 기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중간지원조직이 새롭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기존 운영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침해하고 방해해선 안 된다고 본다.

중간지원조직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기존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프로그램들 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개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일 수 있는 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중간지원조직은 관과 민의 산술적 중간에 위치하지 않고, 민의 의견을 모아서 관이 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의 산하가 아닌 민간 비영리 단체로 있을 때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행정의 하부단위로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5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본 연구에서도 관 주도로 설립한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주도로 설립한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에 따라 입장과 시각에 온도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제약이 적다 보니,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을 탈피한 여러 시도가 가능했고 상대적으로 운영단체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시의 예산지침 등을 준용하다보니 행정절차의 복잡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업내용과 예산 계획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대행기관 또는 옥상옥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과 운영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운영기관까지 모두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7-12. 제언

1) 민간단체들의 자생적 발전방안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원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엄격한 한 가지 기준으로 줄기를 설정해 버리면 주요 노선에서 빠지는 것들이 발생한다. 주요 노선에서 빠져있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지원 시, 모든 기관에 동일한 지침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과 행정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방식들이 개성을 살려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간섭과 제약이 심해질수록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기획의 참신성은 그와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 중에는 공모기관 선정 시 탈락기관들에 대한 패자부활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특정 하나의 기관으로 쏠려서는 안 되며, 관에서 지원받는 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미비하여 지속가능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금 외에도 자체사업을 통한 재원 충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요소로 언급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민 후원문화 활성화’도 한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주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주권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지 그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주권자로서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발굴하여 지원하되 그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자정 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새로이 시도하는 집단을 지원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이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에 대한 자성과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인력풀을 직접 꾸리는 것 역시 인력풀 관리 자체가 권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기존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중간지원 조직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신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치법규는 2014년 서울(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을 시작으로 경기, 전북, 전남, 세종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후 서울에서는 2017년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요청으로 중간 지원조직 성격의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출범하였고 현재 (사)흥사단에서 수탁 운영 중이다. 이듬해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중간지원조직 으로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조례 제정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2020.04.01.)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별도의 센터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조례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안 제11조)’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여기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무엇을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

으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유형,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에 참여한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에 해당되어, 별도의 전담인력, 예산, 조직, 기구의 배치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민주시민교육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역량 있는 실무자를 채용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주시민 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신설과 관련, 구성 방식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면 양지와 그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경우, 기존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던 일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향에 편향될 우려가 있고, 또는 자신의 일을 넘어 중간지원조직의 일까지 겸하게 되는 경우 버거워할 수도 있다. 반면 전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집단은 그 사업을 기존처럼 수행하지 못 하게 될 것이고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광주시민재단, NGO센터 등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띤 조직들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과의 관계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잘해온 어떤 집단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들에게 구성권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더불어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에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하다. 어떠한 운영 형태이든 모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또한 그 분석은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현장의 환경, 지역의 특이성, 제도적 특성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한 가지의 형태를 미리 답으로 정하기보다는 주민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민관의 중간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사업활동 방향과 그 과제 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강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대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적 줄기를 미리 엄격하게 정해두고 그 프레임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 간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표 19]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구분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재단법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확장 가능성 -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행정의 가교역할 용이 -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위한 유연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의 연결강화 - 고용의 안정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모 공공기관의 업무에 편향된 행태 가능성 - 민간과의 스킨십 부족 - 경직된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우월적 지원에 따른 종속성 문제 - 행정 단위 칸막이 극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직원의 관료화 - 시간 경과에 따라 민간 단체와의 친밀도 감소 - 행정 차원의 정무적 판단과 설립 시간 소요

(※출처: 최준규, 2020, p.18)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자발적, 자율적, 다양성을 갖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 전망과 자기 발전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주어야 한다. 이를 중간지원 조직 운영 방식과 결합하여 논의한다면, 단기적인 운영 방식 모델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형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적 변화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입체적,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초기에는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작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 어느 정도 안정화 궤도에 오르면 재단법인이나 다른 민간위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정한 다섯 곳의 중간지원조직을 편의상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이분화했지만 설립목적, 운영방식, 형태, 프로그램 등에 있어 각자 구분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틈새에서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장에 보다 밀착된 다양한 지점에서 기능적으로 특화된 다양한 성격의 조직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차 중간지원조직을 단일화하고 주민 자치회와 협력해 나가는 추세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비슷한 중간지원조직을 단일화하여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전달체계 안에서 행정기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평적 관계,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그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 자발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업무의 독립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된 민주시민교육법이 누군가의 선점으로 인해 파이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 전문가 그룹의 사적 욕망 없는 결합,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전담 조직이나 기구 신설에 대한 정당성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법안이나 조례에 근거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 스스로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 타 기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다른 유형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전담 조직에서 상시업무로 포함시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치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국가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다시 우리에게 이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주권자로서 시민을 인식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위치에서 시민들이 자치 역량을 키우는 비판적인 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일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추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존의 관행에 대한 존중과 반성, 연대와 협력,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8. 요약 및 정책 제안

8. 요약 및 정책 제안

8-1. 연구 목적과 방법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다양한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민주시민교육의 일반화와 다원화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뼈대만 커짐에 따라 당파성과 형해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인권, 평화, 통일, 헌법교육 등과 차별성 있는 독립적 교육영역 설정, 정치적 편파성 강화와 양극화, 폭력적 자기표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과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구축, 지역과 전국 단위의 실태에 관한 다차원적 연구 진행,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평가 체계를 확립,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관련자와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간지원조직 포함),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제약 조건(최소 공통요소)을 정리, 최소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요소 분석(중간지원조직, 5.18을 비롯한 지역적 맥락의 영향 등),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법제화에 필요한 독립적 교육영역과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위해 현재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초점 집단면담 등을 활용하는 문화기술지형태의 귀납적 접근을 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심층 면담과 초점집단면담 기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덧붙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2019)’ 등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실태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 등을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담 등 질적 연구의 결과물 분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총 12개 단체 22명의 민주시민교육 진행자나 참여자,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통해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의 최소 공통 조건, 둘째, 최소 공통요소를 충족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저해 및 활성화 요소, 셋째,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역할 방향 등에 대한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8-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최소 공통 조건 : 주권자 교육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의 최소 공통 조건에 관련한 연구 결과는 첫째,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상이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2019)”에 따르면 기관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기관은 참여하였고, B라는 기관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민주 의식 함양이나 시민교육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의미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자율성, 권리, 자기실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과 공동체, 책임 의식, 연대성 등 공동체적 덕목을 강조한 입장들이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적 합의가 부재함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 교육 특히 주권자로서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때 국민이란 단어 대신 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모든 면담 대상자(무응답 1명 제외)에게서 나왔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국가와 전체의 종속범주로 이해하는 대신 사유와 행위의 자율적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자신을 자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해야 함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면담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자율적 삶의 주체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시민성 교육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의 연구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5.18, 통일, 환경운동, 지역 인문학, 자원봉사,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로서 이들 사이에서 주권자 자각과 존중, 연대 수준에 따른 참여와 소통 등 주권자 교육의 요소가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주권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기준에 중첩적 합의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능동적 시민성 발현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함양이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면담 대상자들은 공론장에 참여하여 서로를 동등하게 자율적인 주권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로서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을 민주주의의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체로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면담 대상자들이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 제시에 있어서 공론장 참여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한다고 생각한다.

주권자 교육의 세 가지 요소를 주권자로서 자각 교육,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교육, 능동적 시민성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범위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능동적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 발현을 위한 참여와 의사소통능력(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된 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최소 공통요소로서 주권자 교육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8-3. 민주시민교육 유형 검증, 저해 요소 및 활성화 요소

1) 유형 검증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활성화 요소를 분석하는 작업 과정에서 정원규 연구팀의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2019)」의 6가지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가 확인되었다. 우선 사회적 주제&의제 중심 유형에서 활성화 요소로 강조되는 전문성 확보의 경우, 광주지역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성 있는 고른 강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부터 심화, 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요구된다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적 주제&의제 중심 유형의 활성화 요소인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여부 또한 조사대상 프로그램 운영자와 참가자들로부터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관심과 의미의 접점을 찾는 부분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주제&관계 중심 유형의 활성화 요인인 민주적 지도자 확보의 경우 강요와 억압에 저항한 5.18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민주적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대답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주제&관계 중심 유형의 활성화 요인 공동 산출 결과의 경우, 광주지역의 각 프로그램들의 질문 응답자들에게서도 강의형과 주입형에 대한 거부감. 참여형에 대한 목마름의 응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적 주제&활동 중심 유형의 활성화 요인인 운영진의 기획력의 경우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획을 제안할 수 있는 활동가가 부족하며, 기존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판을 읽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기획력 향상을 위한 연수 그리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주제&활동 중심 유형의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요소의 경우, 인구 규모가 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성 확보를 하기 쉬운 지역공동체의 특성이 있어, 운영진과 참여자 간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런 응답 속에서 인격적 신뢰가 활성화 요소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원규 연구팀이 제시한 6가지 유형별 활성화 요소는 광주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었으며,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유의미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광주지역 연구에서는 이러한 6가지 유형별 활성화 요소를 기초로 하여 저해 요소-활성화 요소의 구도로 새롭게 분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한 저해 요소들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으로서 활성화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2) 저해 요소

민주시민교육의 저해 및 활성화 요소는 각각 8개와 9개로 정리되었다. 저해 요소에는 첫째, 프로그램 전반에서 소비자로 머무는 참여자 문제가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제공된 주체적 참여 기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거부하고, 자신의 현실적 이익과 취향만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마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가게의 매대에 전시된 상품처럼 소비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하향식으로 기획, 구성되고, 참여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익숙해진 참여자들이 다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수용하고, 진행자와 참여자를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품 매매과정으로 변질한 프로그램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자각이나 능동적 시민성 발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 내부에 존재하는 위계적 질서 문제가 있다. 토론과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 운영 방향을 결정하나 토론과 토의의 과정에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나이와 경력,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토론과 토의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셋째, 저해 요소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진행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연결된다. 민주적 의사소통보다 나이와 경력 등 위계가 프로그램 운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또 많은 이들이 토론과 토의에 걸리는 시간적 비용들을 부담스러워하며 프로그램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결정을 미루는 경향성이 맞물려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에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형태의 의사소통 부재가 일반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다.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도,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해 폐강되는 경우도 많았고, 참여자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얻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때 지역 주권자들의 삶의 공간과 관심, 시의적 요소들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있다.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의 인기 있는 주제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이를 대상자들에게 하향식으로 제공하며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는 지역 거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참여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주체로서 자각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자신을 상품의 소비자처럼 인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관리 정책의 부실함 또는 부재의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생활 속 실천으로 옮겨나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배움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참여자들이 추후 진행자와 기획자로 성장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의 각종 교부금에도 목적 의식적으로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를 찾기 힘든 상황을 볼 때, 해당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단체들이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음이 예상된다.

일곱째와 여덟째는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정책적 반응성의 문제가 있다. 2019년 지역 민주 시민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나에 배정된 예산이 평균 약 30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당 예산 지원 출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상황이고 시민들의 후원이 저조하다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작고, 그마저도 출처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프로그램 재정 상황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지역 시민 주체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기보다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3) 활성화 요소

연구진은 저해 요소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를 8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하향식 프로그램 구성·운영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겸한 프로슈머 형태를 갖추게 하고,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시민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하여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개입하게 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역 거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기획되게 만들어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능동적 시민성을 발휘하는 것을 보다 쉽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기성 사회의 위계적 구조의 부당한 간섭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시에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해당 갈등 지점에 관련한 기존 사회적 합의 등) 조사를 시행하고, 갈등 발생 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사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며 합리적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관계 개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지역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권자들이 지역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친근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다른 동등한 주권자들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권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더욱 확고하게 자각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프로그램 속에서 함양한 능력들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²⁰⁾들을 자료화하고 프로그램 기획자, 진행자, 참여자는 물론 시민과 각종 기관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들은 중복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강사진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다른 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각 프로그램 간 내용 구성에 대한 합리적 역할분담, 독창적 프로그램 기획 등을 이루어낼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기관과 참여자, 진행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사이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목표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만 기대지 않고 사업 시작 전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계획에 맞춰 참여자들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네트워킹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 모델 및 예산, 장소,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동문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행정 재정 지원의 핵심 전제로서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정책의 큰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이 시간과 장소, 시민들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민 후원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품이 아니며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고 거래행위가 아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내부에서 진행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상품의 거래로 전락할 경우 그것은 도구적 이성애

20) 시기별 프로그램 내용, 운영공간, 강사진, 프로그램별 진행 상황, 관련 법령, 각종 보조 및 지원시스템 등등

의한 인간소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참여하여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주권자로서 자각, 능동적 시민성 발휘 등 민주주의자로서 성장이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진행자와 참여자가 모두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이고 그 핵심 관건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적 토대 마련이다.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문화 캠페인 등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홉째,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교육환경은 점차 온라인 및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으로 변모할 것이다. 미래 교육의 방법론적 핵심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의 확대이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변화 모습에 민주시민교육이 발맞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진의 역량 강화이다.

8-4. 정책 제안 :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사이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와 지역별 주민 조직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간매개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내의 교육 활동이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그리고 정부와 이들 사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은 위상적으로 ‘중간(intermediaries)’조직과 기능적으로 ‘지원(support)’ 조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체를 연계·조정·지원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육성, 자원과 기술의 중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 경영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정책연구 제안, 심사 및 인증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관에서 설립, 위탁한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하였고, 연구대상으로 공공영역의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5.18 기념재단, 민간영역의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시민자유대학,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등 총 다섯 곳을 선정하여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1)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프로그램 현황

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중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노뚝돌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진흥원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공모사업 형태로 시민학, 인문학, 광주학, 공동체, 미래학 등의 과목 형태로 범주를 분류하여 ‘광주 시민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강좌와 함께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한 탐방 코스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광주알기 답사’와 ‘시민교육 나눔 강사’ 프로그램 등 체험형, 활동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노뚝돌은 방송 매체를 통한 주제별 릴레이 강연과 정기적인 인문주간 행사, 인문마을 프로그램 등 기획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강의형, 혼합형 강좌로 운영하고 있었다.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성패 요인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진흥원은 시민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광주 시민교육 특화모델을 운영 및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실무자의 업무 과중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풍부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글쓰기, 책읽기 모임을 구성해 인문마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활동가, 실천가 부족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 공공·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의 방향

중간지원조직이 향후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토대이념과 현실의 시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룬 정의·자유와 평등·차이와 차별·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의 개념과 이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지역 문제의 시의성을 담아내야 한다. 둘째,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한 교육 즉, 참여형 주권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준비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일수록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넷째, 차이를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양극화를 봉합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통일교육을 넘어선 평화교육, 세계 시민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만족도와 성공 유형 분석

강의형, 혼합형, 활동형 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 중 활동형, 체험형이 기획 의도 달성에서 성공적이거나 참여자의 만족률이 높은 방식으로 꼽혔으나 어느 특정한 운영방식이 해답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운영방식과 더불어 진행자와 참여자 간 소통, 참여자의 태도 등이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운영방식이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강의형이 적합하지만, 지식과 더불어 기술, 태도를 알려려면 단순히 강의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의 프로그램은 단순 강의형이 아닌 혼합형 또는 활동형을 지향해야 한다. 배운 내용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행위나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실천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만족도와 성공도 모두를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고 활동형만이 일률적인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4)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사례를 통한 필수 보완 요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도출된 필수 보완 요소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공공기관의 개방적 자세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수행 태도에 따라 강좌 프로그램의 질과 관계없이 운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무엇보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므로 그들의 개방적 자세와 기본적 봉사 정신, 책임감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을 참신하게 기획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회 및 인력풀 제공이다. 기획단계에서 사업 방향 수립에 강점을 가진 학자들과, 실천적 요소에서 특화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한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 및 학습의 연결성 확보이다. 단기로 종료하기에 아쉬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 입문 과정에서 심화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상 계열성, 연결성이 필요하다.

5) 중간지원조직에 요구되는 역할

중간지원조직에 바라는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기관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시스템 역할이다. 이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간,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간 틈새를 메우기 위한 소통을 의미한다. 단체 간 우수/실패사례의 공유 및 컨설팅을 통한 성과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기관/단체의 강약점을 기반으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공간의 확보 및 관리이다.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구축된 공간적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거점 공유공간을 확보,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예산과 인력지원 및 관리이다. 활동가들이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창의적인 프로그램 아이템과 사업기획력을 가지고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활동가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6) 중간지원조직에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정책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기능과 특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과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 조직지원 등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과 더불어 법적 근거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과 정부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이나 조례 등을 통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원 다양화를 통해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적 반응성을 갖추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반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과 직접 맞는 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단체들의 요구 즉 시민의 요구가 자유롭게 되먹임되어 개선되는 환류(還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적 구성이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한 지식, 다양한 업무 경험(기획, 연구, 교육, 행정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현장경험과 행정력, 그리고 시민사회와 사업 주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선발방식의 공개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조된다.

7)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중간지원조직 형태에 따라 사업연계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공공영역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업무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민간영역은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거나 공동기획 시에만 소요경비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하였다. 사업 진행 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 공간, 행정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산, 인력, 공간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도 고통받았다. 또한, 과도한 행정규제와 절차, 행정기관 스스로 지원이 아닌 관리, 감독, 지시, 통솔로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행정기관과의 관계적인 측면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경우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계가 원활치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무관심할 경우, 시민참여도나 프로그램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시민교육 운영과정,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행정기관 간의 이상적 관계상은 예산을 주고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이다. 이때 둘 간의 위계적 구별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정립과 둘 간의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중간지원조직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와의 관계

중간지원조직과 프로그램 운영단체 간 사업연계 형태는 공공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주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민간영역의 경우 주로 기관 간 연계사업 또는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운영단체와의 이상적 관계상은 전연한 행정기관과의 이상적 관계상과 마찬가지로 수직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였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운영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의제화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운영단체들과 사업영역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역할 구분이 필요하므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권력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운영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운영기관까지 모두가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제언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원적 인식이 우선하여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예산과 행정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성을 살려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관에서 지원받는 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최종 지향점인 주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먼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지 그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이때,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발굴하여 지원하되, 그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자정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4월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별도의 센터나 중간지원조직에 관해서는 조례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담 조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전담 조직의 운영유형,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역량 있는 실무자를 채용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지리라는 기대에서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라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띤 조직들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과의 관계성이나 역할분담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하다. 어떠한 운영 형태이든 모두 장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또한, 그 분석은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현장의 환경, 지역의 특이성, 제도적 특성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정한 한 가지의 형태를 미리 답으로 정하기보다는 주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자발적, 자율적, 다양성을 갖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 전망과 자기 발전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주어야 한다. 이를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과 결합하여 논의한다면, 단기적인 운영방식 모델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형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 더 밀착된 다양한 지점에서, 기능적으로 특화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행정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차 중간지원조직을 단일화하고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기능이 비슷한 중간지원조직을 단일화하여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전달체계 안에서 행정기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그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 자발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 특정 법안이나 조례에 근거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 스스로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일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관행에 대한 존중과 반성, 연대와 협력,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양승실, 유성상, 박현정(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보고RR 2011-09, 한국교육개발원.
- 고명희(2019). 『생협평론』 37,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9). 『광주시민대학 민주인권 시민교육 실태조사』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김기현(2011).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및 워크숍 자료집』, 47-59.
- 김용찬(2010). “세계화·민주주의 공고화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방안.” 『교육논총』 30(2). 65-75.
- 김원태(2006). 『주요외국 학교시민교육 내용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진솔·남윤섭·안동훈·안현준·임현정(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제주특별자치도 4개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 22, 183-206.
-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 81~125.
-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2003).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달숙(2011).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85-121.
- 문미희(2006).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Rest의 도덕성 4 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0(2). 341-362.
- 사회와 철학 연구회(2014). 『한국 교육현실의 철학적 성찰』 서울: 씨아이알.
- 신두철·허영식(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Ⅱ: 방법론』 서울: 오름.
- 심성보, 이동기, 정용주, 홍윤기(2016). 『서교육2016-41 :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심성보·이동기·장은주·케르스틴 폴(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 염경미(2018).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서울: 살림터.
- 염민호·이효성·오종욱(2017). “민주·인권·평화 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의 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87-137.
- 원미순·박혜숙(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6.
- 이강수·최종순·강석·송명희·심수정·이정순·양은숙·이울아(2017).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 제고 방안』 광주교육정책연구소.
-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3), 157-185.
- 이종원·김준홍·이재연(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 체계 개발 연구II: 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박수억(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수찬, 2013,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NGO 학회』 8(1), 1-33.
- 장은주(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피어나.
- 정병순(2020). “중간지원조직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발전전략-서울시 사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진단과 혁신 역량강화교육 자료집』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정성호(2002). “한국인의 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41, 149-164.
- 정원규·김원석·옹진환·정하윤(2018).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원규, 김형철, 박인혜, 설규주, 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정책중점 연구소.
- 정충대·정해철(2012). “세계시민교육연구(ICSS) 자료를 활용한 시민지식 결정 요인 분석.” 『사회과교육』 51(2), 135-154.
- 최용성(201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적 개발·적용·검증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4, 175-223.
- 최종덕(2015).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지향.” 『교육정책연구』 2, 150-173.
- 최준규(2020). “중간지원조직 운영 형태와 혁신의 방향.”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진단과 혁신 역량강화교육 자료집』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서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 에 출판).

부록1

[표 20] 연구 대상자 개요

연번	특성	연구 참여 시기	연구 참여 방식
1	1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6월	심층면담
2	1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6월	심층면담
3	2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6월	심층면담
4	2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6월	심층면담
5	3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6	3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7	4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8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9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0	6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1	9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2	8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3	8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4	9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5	11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6	11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7	2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8	4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19	7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20	7번 프로그램 참여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21	10번 프로그램 진행자	2020년 7월	심층면담
22	4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23	3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24	1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25	2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26	6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27	5번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2020년 8월	FGI

부록2 질문지

◎ 질문지(프로그램 진행자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에서 광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팀입니다. 저희는 광주지역 내에서 교육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지원체계 구성의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모쪼록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의 소속 단체와 성함, 최근 3년 동안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 중 특별히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을 선정하시어, 프로그램명을 작성해주세요.

<단체-(단체/진행자)>

1. (단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주요 목적과 활동)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2. (단체) 이 단체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들 중 민주시민교육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갖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신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3. **프로그램 내용** : 선정하신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 프로그램을 특별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4. 프로그램 운영방식

- 4-1.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 방식 등은 어떻게 선정되고 결정되나요?
- 4-2.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려면 어떠한 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어떤 공간이 좋은가요? 어떤 공간이 좋지 않은가요?)
- 4-3.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무엇인가요?(강의형/ 활동형/ 혼합형=강의+활동 등)
- 4-4. 프로그램 준비단계에서 참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 4-5.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된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리고 단계별 프로그램 유무와 관계 없이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단계별 프로그램 필요성,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 등)
- 4-6.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후 사회참여활동을 하는지를 살피거나 사회참여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4-7. 참여자 홍보와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4-8.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렴된 의견은 실제로 반영으로 이어지나요?
- 4-9.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정부나 기관과 연계한 사업경험이 있다면 어려웠던 점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5. 프로그램 특징

- 5-1.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나 보완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 5-2. 본 단체와 다른 단체 모두 포함하여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5-3.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것이 발행되나요? 자격증 발급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진행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 5-4.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연계된 요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적 요소를 추출해보신다면?

<관계>

6. 진행자와 참여자 관계에 있어서

- 6-1. 참여자들은 어떤 진행자(강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자들이 기피하는 진행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6-2.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을 힘들게 하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6-3. 참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때(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떻게 조정하나요?

7. 참여자와 참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 7-1. 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관계 맺음이나 소통이 많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자들 간의 관계맺음이나 소통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를 활용하시고 활성화하시는 편이라면 그 방법은? 등등)
- 7-2.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도 모임을 갖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갖는다면 어떤 식의 모임(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갖는지요?
- 7-3.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로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2~3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8. 사회적 효과

- 8-1.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또는 예상한 결과는 무엇이고, 참여자들에게서 기획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8-2. 프로그램으로 인해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나요?

9. 개인적 효과

- 9-1.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꼭 이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

10. 민주주의

- 10-1. 민주주의는 여러 가치나 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 10-2.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 또는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0-3.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1. (시민)

- 11-1. 선생님은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11-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민’과 ‘국민’ 단어 중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12. 민주시민교육

- 12-1. 선생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2. 민주시민교육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을 3가지 정도 적어주신다면? (ex 민주적 이념과 제도 내용 교육, 민주적 절차와 참여 방식 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
- 12-3. 민주시민교육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시민교육이 특별히 다루어야 할 주제나 염두에 둔 교육방식이 있나요?

13. 주권자 교육

- 13-1.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3-2. 우리지역에서 주권자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또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13-3. 주권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중간지원조직(정부로부터 정책집행을 위탁받아 시민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권자 교육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

<시민적 가치를 배태한 덕성과 역량을 갖춘 주권자>

자신과 동료 시민들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배려의 태도를 지니며, 사회적 연대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 하에 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자각하고, 또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공감, 사회적 의사결정, 사회참여, 성찰 등의 역량을 갖춘 사람

14. 제언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중간지원조직(정부로부터 정책집행을 위탁받아 시민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 질문지(프로그램 참여자용)

※ 질문 범주에 따른 구분

0. 선생님 성함과 최근 3년간 참여하셨던 프로그램 중 특별히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 이름을 선정해서 작성해주세요. (이하 질문들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단서조항이 없는 한 0번에 작성해주셨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단체>

1. 선정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내용/운영방식/특징>

2. 프로그램 내용

- 2-1. 선정하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 프로그램을 특별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2-2. 특별히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3. 프로그램 운영방식

- 3-1.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무엇인가요? (강의형/ 활동형/ 혼합형=강의+활동)
3-2.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반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3-3.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및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4.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른(단계별)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심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나요? 없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3-5. 참여한 프로그램의 단계가 변화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나 계속 참여하나요?
3-6.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진행자)로부터 조력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3-7. 어떤 홍보나 모집공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4. 프로그램 특징

- 4-1.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나 보완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 4-2.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증 같은 것이 취득되나요? 이수증 취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자격증의 용도 질문 포함)
- 4-3. 혹시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에 실망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계-진행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5. 진행자와 참여자의 관계

- 5-1.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진행자(강사)를 선호하나요? 참여자들이 기피하는 진행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진행자와 연락을 하시나요?
- 5-2. 진행자나 다른 참여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단한 혹은 겨우 끝마친 경험이 있으신지요?
- 5-3.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떻게 조정하나요?

6. 참여자와 참여자의 관계

- 6-1. 프로그램 참여시 참여자간 관계맺음이나 소통이 많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관계맺음이나 소통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프로그램 내에서 소통과 관계 맺음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등)
- 6-2. 다른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시간 외에 사적인 모임을 갖나요? 어떤 식의 모임인가요?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인가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나요?

<효과-사회적/개인적>

7. 공통적

- 7-1.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7-2. 참여자들에게서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 사회적

- 8-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셨나요?(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이끌게 만들었나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8-2.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이끌게 만들었나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9. 개인적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본인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 진행자용과 동일>

◎ 질문지(중간지원조직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에서 광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팀입니다. 저희는 광주지역 내에서 교육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그리고 정부와 이들 사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지원체계 구성의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모쪼록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중간지원조직** : 행정당국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사이에서 정부로부터 사업과 예산을 위탁받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지원하고, 동시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당국에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

<단체-(단체/진행자)>

1. (단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목적과 활동)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2. (단체) 이 단체에서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최근 3년 동안 지원했던 프로그램)주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 민주시민교육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갖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신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3. 프로그램 내용(‘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관련 질문)

- 3-1. 선생님께서 속한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나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나요?
- 3-2. 향후 우선 지원해야 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신다면 어떤 주제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프로그램 운영방식(‘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운영방식관련 질문)

- 4-1. 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어떤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강의형/ 활동형/ 혼합형=강의+활동 등)
- 4-2. 지원받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 중 기획 의도 달성 성공적이거나 참여자의 만족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취하는 운영방식(강의형, 활동형, 혼합형 운영방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영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4-3. 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중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간, 예산, 홍보 등)
- 4-4. 귀 단체에서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단발성 프로그램과 단계별 프로그램 어느 쪽의 비중이 높은가요? 지역의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금은 어느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 4-5. 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자격증을 발행하나요? 자격증 발급 여부를 떠나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이 갖는 효과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4-6.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후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지를 살피거나 사회 참여 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5. 프로그램 특징(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

- 5-1. 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나 보완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 5-2. 귀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중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5-3. 귀 단체에서 지원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연계된 요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적 요소를 추출해보신다면?

<관계>

6.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 6-1. 귀 단체에서 행정기관과 연계한 사업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관계로 구성되고 진행되어왔나요? (공모, 위탁 등)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고, 어떤 형태가 부적합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 6-2. 귀 단체가 행정기관과의 사업 진행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도움과 가장 어려웠던 점을 그 이유와 함께 작성해주세요.
- 6-3. 귀 단체와 행정기관과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떻게 조정하나요? 민주적으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6-4.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이상적 관계 상(像)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성공적인 관계와 어려웠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7. 중간지원조직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와의 관계

- 7-1. 귀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들과 연계한 사업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관계로 구성되고 진행되어왔나요?(공모, 위탁 등) 그 중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고, 어떤 형태가 부적합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 7-2. 귀 단체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과 사업 진행 시 성공적이었던 사례와 어려웠던 사례, 각각의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 7-3. 귀 단체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과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떻게 조정하나요?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7-4. 중간지원조직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간의 이상적 관계 상(像)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성공적인 관계와 어려웠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성, 특성>

8. 특성

- 8-1.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때 강조되어야 할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²¹⁾
- 8-2. 중간지원조직이 그런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련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²²⁾
- 8-3. 중간지원조직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4.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반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역할과 구성

- 9-1. 중간지원조직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인적 구성의 출신, 선발방식 등)
- 9-2.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행정, 재정, 주제 관련 전문성, 각종 정보, 강사 채용, 공간, 홍보 등)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진행자용과 동일>

21) 정권교체시에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단체들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독립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부족한 점을 신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 전문성 또는 정책적 반응성, 융통성, 재정적 안정성, 창의성, 의사소통성 등
 22) (ex 중간지원조직 임원진 선출 시 행정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선발시스템 구축하여 중간지원조직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등)

◎ 질문지(코로나19 상황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관련 추가 질문)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노들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셨는지요?
 - 1-1. 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취한 조치들?(예시-소독약 비치, 강의 인원 감축, 마스크 착용 안내, 프로그램 중간 식사 금지 등 등, 책 소독기 구매 등 등)
 - 1-2.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셨나요?(예시- 강의 중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면?)

2. 코로나19로 인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가장 힘들었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예시- 강사 구하기 어려운 문제, 시민들의 참여 저조,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어려움, 서버 불안, 온라인 수업 참여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저작권 문제 등)

3.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시-온라인 영상강의 플랫폼 지원, 방송편집실력 연수나 전문가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 저작권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DB 구축 및 지원 등)

부록3 프로그램 운영(안)

◎ 지역인문학센터 노들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 프로그램

번호	구분	프로그램명	유형	일시
1	개막식(공연)	빛의 도시 SHOW 빛고을! 빛짜임!	오프라인	10.24.(토)
2	인문강좌	위로와 평화의 인문학	온라인 (사전녹화)	10.28.(수)~11.01.(일)
3	인문투어	인문반딧불이 도시인문여행 지하철 타고 문화 속으로	오프라인	10.24.(토), 10.31.(토), 11.07.(토)
4	시민토크	인물옵스큐라 광주를 읽는 여섯 개의 시선	오프라인	10.29.(목), 10.30.(금)
5	시민토크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오프라인	10.30.(금), 10.31.(토)
6	전시	인문-미디어 아카이브	오프라인	10.28.(수)~11.04.(수)
7	공모전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온라인	10.12.(월)~10.19.(월)
8	공모전	사진영상공모전 #인문도시광주	온라인	09.28.(월)~11.30.(월)

1. 개막식 빛의 도시 SHOW : 빛고을! 빛짜임! (오프라인)

가. 일 시 : 2020.10.24.(토) 19:00~21: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 후문 특설무대

다. 참여작가 : 신○원, 최○영, 신○우, 임○현 + 광주·전남 시민 28명

라. 참석인원 : 200명

마. 행사 주요내용

- “역사·미래·시민·인문의 빛”을 주제로 각 테마별 시민 창작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공연 및 VR 드로잉 즉석 퍼포먼스를 펼침
- 시민인문예술창작워크숍 <빛의 도시 워크숍>(09.03.~10.24.)을 통해 미디어아티스트 4명의 작가와 시민 28명의 협업 창작 결과를 야외무대에서 공연 전시(드론 촬영 포함 영상 촬영)

구분	테마	작품(공연) 설명	참여작가	참여시민
시민창작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공연	역사의 빛	용기와 희생의 축적 데이터, 역사의 빛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용기 있는 누군가의 피흘림 덕분이다. 역사의 데이터가 쌓여 오늘을 구성한다. 오늘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쌓여 내일을 구성할 것이다. 어제와 내일이 오늘의 우리를 향해 소리친다. 최소의 폭력과 최대의 자유를 향하여.	신○원/ 비디오 포토그래퍼 미디어아티스트 현대미술가 디렉터	정○진, 김○원, 유○라, 한○선, 박○민, 주○자
	시민의 빛	불의와 위기에 만서는 시민의 빛 지금은 코로나 시국! K-방역의 성공은 시민들의 자율적 역량의 결실이다. 촛불시위, 태안 기름 유출, IMF 금모으기, 민주화 운동, 항일항쟁 시민은 불의와 위기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웅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짜이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	신○우/ 미디어아티스트 그래픽디자이너	양○원, 문○종, 곽○근, 서○연, 박○원
	인문의 빛	사람의 온기가 전하는 인문의 빛 억압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메마르고 거칠어지는 감정에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빛>. 그리고 코로나는 일상을 앗아갔지만, 그 소중함도 알게 한다. 늘 함께 살아가면서도 소중함을 몰랐던 함께 살이, <공생의 빛>	임○현/ 미디어아티스트	김○철, 박○음, 김○숙, 이○주, 정○영
시민창작 VR 드로잉 퍼포먼스	미래의 빛	미디어 아트 들불야학 광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최초의 VR 퍼포먼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계속된 시도 속에 현실이 된다. 시민의 빛으로 한 겹, 한 겹 그려지는 미래!	최○영 VR퍼포먼스 디렉터 미디어아티스트	최○영, 박○애, 한○늘, 김○녀, 박○섭, 배○정, 박○량

2. [인문강좌] 위로와 평화의 인문학 (온라인)

가. 일 시 : 2020.10.28.(수)~11.01.(일) 09:25~10:00 / 17:25~18:00 / 01:25~02:00

나. 장 소 : 케이블TV 채널 및 방송사 홈페이지 온에어 서비스

※ 다시보기 :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유튜브 채널

다. 강 사 : 윤김O영, 장이O수, 오O욱, 문O영, 김O봉

라. 행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와 평화의 인문학' 릴레이 강연(1부. 어려운 시대, 여성노동을 돌아본다 / 2부. 평화의 인문학)
- 코로나 일상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혐오와 차별, 폭력과 갈등 문제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돌아보며, 생존의 평등과 공존의 평화를 위한 연결과 연대를 생각하는 계기 마련
- 1부. 어려운 시대, 여성노동을 돌아본다 : 코로나 일상 속 가중된 돌봄/일터 노동의 이중고 속에서 여성 노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여성주의적 재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내용
- 2부. 평화의 인문학 : 평화 운동가들의 현장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과 일상(일터, 십터, 삶터)에서의 평화 운동을 그려보는 내용

구분	주제	강사
어려운 시대, 여성노동을 돌아본다 (1부)	코로나19와 여성의 삶 https://youtu.be/tXrX6_D2aLM	윤김O영 건국대 교수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기 https://youtu.be/Wbh11kFYTmA	장이O수 여성환경연대 대표
평화의 인문학 (2부)	일상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평화실천가 https://youtu.be/VTu-DWFDnqA	오O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평화 https://youtu.be/p7IEtErN_aM	문O영 피스모모 대표
	일상의 비폭력 : 갈등전환과 공동체 자기 돌봄 프로세스 회복적 서클 https://youtu.be/H7HPTNWOPYY	김O봉 (재)남북평화재단 사무총장

3. [인문투어] 인문반딧불이: 지하철 타고 문화 속으로 (오프라인)

가. 일 시 : 2020.10.24.(토)~10.31.(토) 14:00~17:00

나. 장 소 : 평동역, 운천역,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농성역, 하정웅 미술관, 발산마을

다. 행사 주요내용

-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광주 지하철 1호선 주변 인문 콘텐츠 발굴
- 지하철 주변 미술관 전시와 지역민들의 상시적 만남과 접촉을 통해 지역과 일상 곳곳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여가문화 확산
- 시민과 함께 지하철과 도보를 이용하여 지역 문화재, 문화-예술 장소 탐방
- 대중교통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역사 공간, 특색 있는 전시회 및 프로젝트 진행하는 미술관, 지역 기반 예술공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함

회차	행사 일시	주제	장소	강사
1	2020.10.24.(토) 14:00~17:00	도심 속의 사찰 무각사 투어	평동역, 운천역,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김O경 교수
2	2020.10.31.(토) 14:00~17:00	발산마을 투어	평동역, 농성역, 하정웅 미술관, 발산마을	발산마을 해설사
3	2020.11.07.(토) 14:00~17: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투어	평동역, 문화전당역,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전일빌딩, ACC	없음

4. [시민토크] 인물 옹스큐라 : 광주를 읽는 여섯 개의 렌즈 (오프라인)

가. 일 시 : 2020.10.29.(목)~10.30.(금) 14:00~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 김남주기념홀 외 인문대학 1호관 강의실 6곳

다. 강 사 : 류○한, 김○수, 하○흡, 이○초, 김○호, 박○선

라. 행사 주요내용

- 광주 지역의 인문학자, 예술가, 지리학자 등 무형인물자산발굴 프로젝트
-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청취하는 작은 휴먼 라이브러리 체험
- 6명의 사람책 목록 중 읽고 싶은 사람책을 뽑아 시민과 전문가가 소통 담론을 형성하는 인문 토크 콘서트

일정	사람책	주제	사람책 소개
2020.10.29.(목) 14:00~17:00	류○한 인문학자	도시 이야기	인문학자 류○한의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 https://youtu.be/BWKm0YnByN8
	김○수 향토지리학자	광주 지리 이야기	향토지리학자 김○수의 ‘전라도 땅 이야기’ https://youtu.be/ZHKwB-4PO6E
2020.10.30.(금) 14:00~17:00	하○흡 민중화가	5월 미술과 민중미술	민중화가 하○흡의 ‘봄끝에 5월을 담다’ https://youtu.be/0kj2ZEiy-m4
	이○초 명창	소리 이야기	명창 이○초의 ‘소리 이야기’ https://youtu.be/4sthSOPs16M
	김○호 향토사학자	영호남의 인문지리	향토사학자 김○호의 ‘광주의 인문지리’ https://youtu.be/FkrzWC6zYAA
	박○선 사진작가	극한의 순간! 찰나의 포착!	사진작가 박○선의 ‘오지에서 담은 인간의 무늬’ https://youtu.be/WGVVo4_ALBN8

5. [시민토크]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오프라인)

가. 일 시 : 2020.10.30.(금) 19:00~21:00 / 2020.10.31.(토) 13:00~15: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 김남주기념홀(인문대학 1호관)

다. 발 표 : 공모전 선정자 16명

라. 행사 주요내용

- 코로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서로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일상 속 인문독서문화 확산
- ‘내 인생의 책, 나와 당신에게 힘이 될 위로의 한 구절’ 공유 발표 및 현장 인터뷰 (소규모 그룹별 행사, 방송 녹화)
-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책을 통해 서로의 삶으로 스며드는 조화와 소통의 기회 마련

6. [전시] 인문-미디어 아카이브 (오프라인)

가. 일 시 : 2020.10.28.(수)~11.04.(수) 10:00~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 용지관 1층 전시실

다. 행사 주요내용

- ‘인문학, 비대면 시대와 대면하다’를 주제로 디지털 인문학 아카이브 전시
- 시민 창작 인문-미디어아트 쇼 공연 영상 및 VR 드로잉 퍼포먼스 영상 전시
- 인문-미디어아트 프로젝션 매핑 설치 작품 전시
- 인문주간 공동 주관기관에서 제작한 디지털 인문학 강좌 및 인문 아카이브 전시

7. [공모전]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온라인)

가. 기 간 : 2020.10.12.(월)~10.19.(월)

나. 주 제 : 내 인생의 글, 나와 당신을 위로하는 한 구절

다. 참 여 : 48명 응모작 중 20편 선정

라. 행사 주요내용

- 코로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는 책 한 구절 응모
- 연령 및 세대책 주제 등 균형을 고려해 응모작 중 20편 선정
- 선정 문구는 전남대 정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에 가로등 깃발형 현수막으로 전시, SNS 게시
- 지역 거점 동네책방과 연계해 선정 기념품으로 ‘동네책방 책꾸러미’ 증정

8. [공모전] 사진영상공모전 : #인문도시광주 (온라인)

가. 기 간 : 2020.09.28.(월)~11.30.(월)

나. 주 제 : <인문도시광주>의 이미지

다. 선정인원 : 7명(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佳作 4명)

라. 행사 주요내용

- 1분야(사진) : <인문도시광주>의 지역과 장소
- 2분야(사진) : <인문도시광주>의 사건과 사람들
- 3분야(사진, 영상) : <인문도시광주> 좋아요!
- 4분야(영상) : <인문도시광주> 영상
- 시상금 :
 - 최우수작 : 1명(상금 40만원)
 - 우수작 : 2명(상금 30만원)
 - 가작 : 4명(상금 20만원)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시민대학 프로그램 교육내용 예시

1. 인권 감수성 UP! 자원봉사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 가. 분야: 시민학
- 나. 기관명: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 다. 교육대상: 자원봉사자 및 (단체)리더 및 활동가
- 라. 교육인원: 20명
- 마. 교육장소: 북구자원봉사센터 교육실

차시	세부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1	'자원봉사와 인권' ☞ 자원봉사의 이해, 인권의 이해, 자원봉사와 인권의 관계	황○철	강의, 실습체험
2	'법과 인권' ☞ 법에서의 인권	최○욱	강의, 실습체험
3	'대상별 인권 I' ☞ 장애인 이해하기, 장애인 인권, 나의 인권감수성 깨기	박○동	강의, 실습체험
4	'대상별 인권 II' ☞ 노인 이해하기, 노인 인권, 나의 인권감수성 깨기	정○정	강의, 실습체험
5	'대상별 인권 III' ☞ 아동·청소년 이해하기, 아동·청소년 인권, 나의 인권감수성 깨기	허○영	강의, 실습체험
6	'인권적인 강사되기' ☞ 인권 강사의 가치 및 철학, 기본소양 다지기	김○화	강의, 실습체험
7	'인권현장에서의 러닝퍼실리테이션 I' ☞ 인권현장의 효과적 소통&공감 교육 기법(기본기)	김○하	강의, 실습체험
8	'인권현장에서의 러닝퍼실리테이션 II' ☞ 인권현장의 다양한 소통&공감 교육 기법	권○영	강의, 실습체험
9	'인권현장에서의 러닝퍼실리테이션 III' ☞ 인권현장의 다양한 소통&공감 교육 기법	김○하	강의, 실습체험
10	'인권현장에서의 소통&공감 실천워크숍' ☞ 인권현장의 실천워크숍 설계 및 발표	권○영	강의, 실습체험

2.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

가. 분야: 광주학

나. 기관명: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다. 교육대상: 광주시민 (경력단절여성 및 은퇴자 등 포함)

라. 교육인원: 20명

차시	장소	세부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1	동구미로센터	學校史로 보는 광주의 역사	김○진	개강 및 강의
2	518 민주화기록관	기후 위기시대에 광주에서 사는 법	박○경	강의
3	광주 일대	광주천 일대 답사	김○선	탐방
4	518 민주화기록관	광주의 역사와 사직동	노○태	강의
5	광주 일대	사직동, 양림동 일대 답사	노○태	탐방
6	동구미로센터	광주의 옛 건축 이야기	천○엽	강의
7	동구미로센터	광주 도시공간의 변천과 미래	류○국	강의
8	동구미로센터	광주의 옛 모습과 지명	손○하	강의
9	동구미로센터	광주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남○숙	강의
10	동구미로센터	워크숍 - 모듈별 토론 - 나의 광주 롤링페이퍼 - 광주사랑 모임 구성	김○하	워크숍
11	광주 일대	광주 땅 이야기	김○수	종강 탐방

3.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교육 II

가. 분야: 시민학

나. 기관명: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다. 교육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라. 교육인원: 25명

차시	장소	세부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1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내가 증거다-다시 태어난 5.18(전일빌딩 245)	이○훈	강의, 답사
2	5.18기록관	5.18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밝혀진 흔적	안○철	강의, 답사
3	카페싸목싸목	국가폭력과 문화예술 : 노래패	주○주/강○향	체험담, 시연
4	대전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힌 국가폭력 가해자들	방○진/홍○표	강의, 답사
5	골령골, 대전형무소	학살현장과 유해발굴, 골령골 대전교도소	임○근	강의, 답사
6	카페싸목싸목	6월항쟁과 광주 - 이한열 열사	이○란	강의, 체험담, 유족의 증언
7	카페싸목싸목	서훈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김○길/김○흥 방○진/이○순	강의, 대담, 유족 증언
8	카페싸목싸목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 징용, 근로정신대	이○연/김○희 양○덕/윤○호	강의, 피해자 체험담, 유족 증언
9	카페싸목싸목	그 후, 트라우마의 치유와 대응	정○영	사례 중심 강의, 대담
10	나주영산포	수탈과 저항의 역사 태죽 밭가: 나주영산포	김○철	강의, 답사
11	목포/신안	수탈과 저항의 역사 태죽 밭가: 목포/신안	이○훈	강의, 답사
12	카페싸목싸목	낙검자 수용소(몽키하우스) 전쟁, 전시체제와 여성	정○석	강의, 답사
13	카페싸목싸목	독재와 금지곡	문○식	음악과 해설

4. 인문학으로 설계하는 민주·인권의 광주정신

가. 분야: 시민학

나. 기관명: 광주전남작가회의

다. 교육대상: 기초수급자,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일반 시민

라. 교육인원: 20명

마. 교육장소: 유비바다스튜디오(녹화강의)/ 남구자활센터(대면강의)

차시	장소	세부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1	유비바다 스튜디오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윤리 -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중심으로	심○의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2	유비바다 스튜디오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 -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중심으로	심○의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3	유비바다 스튜디오	오월문학으로 보는 인권과 저항의 등식	이○철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4	유비바다 스튜디오	광주전남 문학사로 보는 광주의 문학정신	이○철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5	유비바다 스튜디오	영화로 보는 오월 인문학1 - 영화 '꽃잎'과 '26년'을 중심으로	박○서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6	유비바다 스튜디오	영화로 보는 오월 인문학2 - 영화 '화려한 휴가'와 '택시운전사'를 중심으로	박○서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7	유비바다 스튜디오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와 인권	고○종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8	유비바다 스튜디오	고야의 그림 <1808년 5월 3일>과 5·18	고○종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9	유비바다 스튜디오	소설 '양철북'이 제시하는 역사참여 방식1	정○종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10	유비바다 스튜디오	소설 '양철북'이 제시하는 역사참여 방식2	정○종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11	유비바다 스튜디오	광주, 기억의 길을 따라서 - 희곡 '죽음과 소녀'를 중심으로	이 ○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차시	장소	세부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12	유비바다 스튜디오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사로 보는 국가와 인권	강○진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13	유비바다 스튜디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으로 보는 탈식민주의	강○진	강의 녹화 온라인 학습
14	유비바다 스튜디오	국토와 저항의 시인 조태일	이○순	강의 녹화 촬영
15	남구자활센터	전라도 정신과 시인 이성부	이○순	강의, 토론
16	광주광역시	광주알기 답사 (민주·인권 평화의 길)	김○희	해설, 답사
17	남구자활센터	윤이상으로 듣는 저항의 음악정신1	박○욱	강의, 토론
18	남구자활센터	윤이상으로 듣는 저항의 음악정신2	박○욱	강의, 토론
19	남구자활센터	자연 생태계에서 보는 질서와 평화 그리고 공생	안○일	강의, 토론
20	남구자활센터	종강, 설문지 작성	주○국	설문지 작성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광주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연락처 031-361-9500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발행인 지 선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기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제작 (주)폴인사이트
I S B N 979-11-87593-69-0

연구책임자 **박구용** | 전남대학교
공동연구원 **곽유미**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구희남 | 광주광역시교육청
김동혁 | 광주광역시교육청
김혜영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최종순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